연구총서 05-10

#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연구책임자 | 손기웅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5-10

#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연구책임자 | 손기웅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인 쇄** 2005년 12월
**발 행** 200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관계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5,5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 손기웅.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연구총서 ; 05-10)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334-5 93340 : ₩5,500

331.23-KDC4
305.235-DDC21 CIP2005002841

#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Ⅰ. 서 론 ····· 1

Ⅱ.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관심 현황: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7
1. 통일문제 관심도 ····· 11
2. 통일관 ····· 14
3. 북한 인지도 및 대북관 ····· 16
4. 대북정책 및 북한·통일문제 정보획득 경로 ····· 18
5. 통일교육 ····· 19
6. 보완설문조사 결과 ····· 21
7. 평가 ····· 25

Ⅲ. 서독의 청소년 통일관심 제고 사례 ····· 29
1. 정치교육 ····· 31
가. 정치교육의 의의 ····· 31
나. 정치교육의 체계와 운영 ····· 35
다. 평가 ····· 46
2. 동서독 청소년교류 ····· 48
가. 청소년교류의 법적 기초 ····· 48
나. 청소년교류의 현황 ····· 53
다. 평가 ····· 55

**Ⅳ. 청소년 통일관심 제고 방안** ····· 59
1.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통일교육 강화 ····· 61
2. 청소년 통일문화의 형성 ····· 68
가. 청소년의 정체성과 통일관 ····· 68
나. '일상' 그리고 청소년 통일문화 ····· 71
다. 청소년 통일문화의 특징 ····· 73
라. 청소년 통일문화의 형성 방안 ····· 78
마. 남북한 청소년 교류 ····· 86

**Ⅴ. 결 론** ····· 93

**참고문헌** ····· 98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01

# 표·그림 목 차

<표 Ⅱ-1>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 12
<표 Ⅱ-2> 청소년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태도 ····· 13
<표 Ⅱ-3> 청소년들의 이념적 성향 ····· 24
<표 Ⅲ-1> 서독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시대별 교육중점 ····· 43
<표 Ⅲ-2> 정치교육을 위한 정당재단 ····· 45
<표 Ⅲ-3> 서독정부 지원에 의한 서독 청소년·학생의
동독수학여행 현황 ····· 54

<그림 Ⅲ-1> 서독의 정치교육 개관도 ····· 38

# I

# 서 론

청소년들은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내어야 할 주역인 동시에, 통일에 따를 이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감당해야 할 당사자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하여 건전한 시각과 관심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크게 낮은 것으로 각종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고려 아래 청소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시각과 관심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향후 통일의 동력, 통일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청소년들이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문제 관심도와 통일관, 북한 인지도와 대북관, 대북정책, 북한·통일문제 관련 정보획득의 경로, 통일교육 등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서독이 분단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실시하였는가를 특히 정치교육과 동서독간 청소년교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의 통일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이행되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분단국인 우리의 입장에선 연구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서독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대동독 화해협력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내적 및 대동독 세부정책은 향후 우리에게 원용될 수 있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서독의 노력 가운데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정치교육과 동서독간 청소년교류가 그 중심에 놓여 있었고 따라서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물론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국민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방향과 방안을 기본적 원칙과 세부추진방안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이 글의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활용할 것이다. 첫째, 남한 청소년들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시각과 관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것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보완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둘째, 동서독이 분단기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실시한 조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정보를 분석할 것이며, 현지에서 면담을 실시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 있어서 청소년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국한하고자 한다. 청소년에 대한 법적 규정은 법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중학교 및 고등학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1] 초등학생의 경우 청소년 범주에 속하지만,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실시될 관련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제외한다.

---

1 현행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만 9~24세를 청소년으로,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근로소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정책을 검토하고, 현재 청소년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현황을 파악한 바탕위에 독일의 사례를 참조한 관심 제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Ⅱ

#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관심 현황: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청소년이 통일 시대의 주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청소년 중에는 통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 통일은 민족의 숙원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말해져 왔지만, 통일문제는 젊은 세대의 큰 관심사가 아닌 것이다. 그들은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정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들과 이야기할 때 통일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기성세대도 통일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기성세대는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당위와 현실 사이에 간극은 있지만 민족적 과제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면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통일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기성세대로 하여금 젊은 세대에게 민족사적 책무를 계몽하기 위한 여러 시도로 나타난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통일의 주역이라는 식의 단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프로젝트의 효과는 현실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점으로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과 소통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장에서는 중・고교생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청소년의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과 관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였다. 활용될 기존의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홍보처의 설문조사이다(이하 [국정홍보처 2005]). 국

정홍보처는 월드리서치를 통해 2005년 5월 27~6월 13일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중학교 523명, 고등학교 477명)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대북관, 통일관, 정부의 통일노력에 대한 견해,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 등으로 이루어졌다.[2]

둘째, 통일연구원의 설문조사이다(이하 [통일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은 2004년 통일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크게 북한·통일관, 북한주민·청소년관, 통일·북한관련 교육경험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3]

셋째,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설문조사이다(이하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및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3]). 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2004년 9~12월 전국 467개 초·중·고교 학생 27,650명(초등학교 117개교 10,075명, 중학교 120개교 9,052명, 고등학교 230개교 8,523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2003년 10~12월 전국 272개 초·중·고교 학생 16,297명(초등학교 69개교 4,151명, 중학교 69개교 4,355명, 고등학교 134개교 7,791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통일 및 북한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4]

넷째,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설문조사이다(이하 [한국청소년개

---

2 (주)월드리서치,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서울: 월드리서치, 2005. 6) 참조.
3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참조.
4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http://www.ksrc. or.kr/youth.html> 참조.

발원 2002]). 한국청소년개발원은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2002년 9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고교생과 대학생(대학교 6, 고등학교 8)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가운데 고교생의 응답을 참조하였다.[5]

다섯째, 이 연구를 위하여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이다(이하 [통일연구원 2005]).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통일연구원은 2005년 수도권 5개 중학교 총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의 수적 제한으로 인해 설문조사결과의 유효성에 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청소년 통일의식의 경향을 파악하고 기존의 설문조사결과를 확인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인 만큼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통일연구원은 2005년 2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북한・통일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본 연구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문항을 포함하였고, 이를 청소년대상 설문조사결과와 비교적 관점에서 활용하고자 한다(이하 [통일연구원 2005a]).

## 1. 통일문제 관심도

[국정홍보처 2005]의 “통일의 방식, 시기, 통일 후 문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란 질문에 대하여 중・고교 청소년들의 58.8%가 전반적인

---

5 길은배 외,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참조.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매우 관심 5.7%, 어느 정도 관심 53.1%)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관심이 없다'(전혀 관심없음 6.3%, 별로 관심없음 34.9%)는 의견은 41.2%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연구원 2004]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란 질문에는 '관심이 없다'(별로 관심이 없다 45.2%, 전혀 관심이 없다 12.2%)가 57.4%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2.6%(약간 관심이 있다 35.5%, 매우 관심이 있다 7.1%)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표 Ⅱ-1> 참조). 또한 "북한 ·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란 질문과 함께 모두 4가지 문장을 제시한 결과 <표 Ⅱ-2>와 같은 응답을 보였다. 즉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다'에 49.9%,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이다'에 45.4%,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의 문제이다'에 41.7%,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이다'에 33.9%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청소년들의 거의 과반수가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1>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단위: %)

| | 관심이 있다 | | 관심이 없다 | |
|---|---|---|---|---|
| | 아주 관심 | 조금 관심 | 별로 무관심 | 전혀 무관심 |
| [국정홍보처 2005] | 58.8 | | 41.2 | |
| | 5.7 | 53.1 | 34.9 | 6.3 |
| [통일연구원 2004] | 42.6 | | 57.4 | |
| | 7.1 | 35.5 | 45.2 | 12.2 |
| 성인들의 평가 [통일연구원 2005a] | 24.5 | | 75.5 | |
| | 5.5 | 19 | 55 | 20.5 |

<표 Ⅱ-2> 청소년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태도

(단위: %)

| | 그렇지 않다 | | 그렇다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 | 66.1 | | 33.9 | |
| | 13.0 | 53.1 | 27.5 | 6.4 |
|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의 문제 | 58.2 | | 41.7 | |
| | 11.4 | 46.8 | 34.7 | 7.0 |
|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 50.1 | | 49.9 | |
| | 9.2 | 40.9 | 43.9 | 6.0 |
|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 | 54.6 | | 45.4 | |
| | 11.8 | 42.8 | 36.8 | 8.6 |

출처: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68에서 재편집.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통일문제 관심에 관한 자체평가와 오늘날의 성인들이 가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생각을 비교한 결과이다. [통일연구원 2005a]는 성인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통일관심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75.5%가 '관심이 없다'('매우 관심이 없다' 20.5%, '별로 관심이 없다' 55%)고 그리고 '관심이 있다'에는 24.5%('매우 관심이 많다' 5.5%,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19%)가 응답하였다. 즉 성인들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실제보다 훨씬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표 Ⅱ-1> 참조).

## 2. 통일관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국정홍보처 2005]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1.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통일이 되기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은 18.1%로 조사되었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17.1%)는 조기통일론 보다는 '다소 늦더라도 부작용 없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64.8%)는 속도조절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한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의 이유로는 '원래 한 민족, 한 국가였기 때문'(41.0%)이라는 민족공동체적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 상태 유지 응답의 이유로는 '사회혼란'(39.2%)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았다.

또한 [통일연구원 2004]도 바람직한 통일의 방식으로서는 늦어지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없는 점진적 통일방식을 선호하는 청소년이 다수였고(59.3%), 통일이 되기보다는 현재의 분단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2할 수준에 달하였다(21.3%).

[통일연구원 2004]에 의하면 통일의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10년 정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46.9%에 달한 반면, 5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1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여(44.0%),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단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그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2004년과 2003년 실시한 설문 "통일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의 결과에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청소년들의 의견은 각각 47.9%, 47.5%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될 것'(2003년과 2004년 공히 63.5%)이 '안될 것'(2003년 14.5%, 2004년 14.9%)보다 월등히 높았다. 통일될 것이라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통일 시기를 묻자 2003년 34.8% 그리고 2004년 39.5%가 '통일은 되겠지만 10년 이내에는 안될 것'이라고 했고, 2003년 30.0%와 2004년 28.5%는 '10년 이내', 2003년 18.0%와 2004년 14.8%는 '5년 이내'라고 답하여, 역시 다수가 통일을 장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에 의하면 최근의 주변정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예상 가능한 4가지의 통일방식을 제시(북한의 무력도발, 우발적인 무력충돌, 흡수통일, 평화적 통일)하고 응답하게 한 결과 8.4%가 전쟁을 통한 통일(북한의 무력도발・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예상한 반면, 흡수통일에 29.9% 그리고 평화적 통일에 61.6%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4단계의 기간을 예시하고 응답하게 한 결과 '5년 이내' 6.5%, '10년 이내' 29.3%, '20년 이내' 33.5%, '20년 이후' 30.7%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상에서 나타나듯이 통일 자체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조사

방법[6]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과반수 이상이 빠른 시일 내의 통일, 즉 현 상태에서는 북한과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북한 인지도 및 대북관

[국정홍보처 2005]에 의하면 전국 중·고교 청소년 3명 중 1명 정도(34.9%)만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실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인지 의견은 65.1%를 보였다. 또한 현재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이 66.6%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견해(33.4%)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인 58.6%가 북한을 '함께 살아갈 동포'라는 동반자로 인식하였다.

[통일연구원 2004]에서도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고 응답한 청소년(46.1%)이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23.3%)의 두 배 수준에 달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이 변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지만(54.9%),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협에 대해서는 75.8%가 위협적이라고 응답하여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

6 [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통일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란 질문에 '통일이 꼭 되어야 한다', '통일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모르겠다'와 같은 3 가지의 직접적인 답변 항목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정홍보처 2005]는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의견입니까?"란 질문에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통일', '늦더라도 부작용 없이 통일', '통일보다는 현상태 유지'와 같이 통일희망 항목을 2개로 하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3/2004]에 의하면 북한의 공식 명칭을(8개의 보기를 제시: ①북조선민주주의공화국, ②북한, ③조선민주주의공화국, ④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⑤북한인민공화국, ⑥북조선, ⑦북조선인민공화국, ⑧모른다)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이 2003년 26.0% 그리고 2004년 22.7%, 잘못 알고 있는 학생이 2003년 28.3% 그리고 2004년 28.7%였으며, 아예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도 2003년 44.9% 그리고 2004년 48.3%였다. 한편 2004년의 추가된 설문항목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북한이 협력대상(50.6%)이라는 대답이 적대대상(16.9%)보다 크게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신뢰대상(15.4%)이라는 응답보다는 비신뢰대상(53.0%)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가 북한학교에 대한 취학의사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 "북한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 고교생의 2할에도 못미치는 수준(19.6%)이 긍정적이었다. 북한지역에 대한 거주의사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 "짧은 기간 동안 북한지역에서 살 수 있다"에 대하여 56.0%가 북한지역에 거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주민(청소년) 접촉의사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 북한주민(청소년)을 "가까운 친구로 사귈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 89.6%가 긍정적이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대북정책 및 북한·통일문제 정보획득 경로

[국정홍보처 2005]에 의하면 대북지원 및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대북지원 53.8%, 남북경제협력 사업 44.2%)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대북지원 23.4%, 남북경제협력 사업 43.9%)는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 정부 및 민간단체들이 추진해온 남북간 교류협력과 대북지원 등이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77.6%)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22.4%)는 의견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통일연구원 2004]에 의하면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현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다수였고(43.3%), 확대보다는 축소를 원하는 청소년이 1할 이상 많았다(각각 21.5%, 35.2%). 그리고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3/2004]에 의하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거나 지원하는 게 좋다는 학생(2003년 41.5%, 2004년 46.1%)이 지원하지 않는 게 좋다거나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학생(2003년 40.3%, 2004년 41.5%)보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많았다.

북한·통일문제 관련 정보획득의 경로와 관련하여 [국정홍보처 2005]에 의하면 중·고교 청소년들은 언론매체(50.8%)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이어서 학교교육(25.9%), 인터넷(11.7%), 정부 발표자료(5.1%) 등의 순을 보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인터넷의 비중이 11.7%로 3위에 그치고 있어 주목되었다.

[통일연구원 2004]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북한·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없다는 응답이 7할을 상회하였다(70.4%). 대화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친구나 선·후배'의 응답률

이 가장 높았고(10.7%), 부모나 학교선생님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통일연구원 2004]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북한・통일문제 관련 정보를 주로 입수하는 주된 경로는 TV・라디오(64.3%)였으며, 인터넷(10.0%)의 응답률이 신문(5.6%)이나 잡지・일반서적(1.8%)의 응답률을 월등하게 상회하여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정보매체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5. 통일교육

[국정홍보처 2005]에 의하면 전국 중・고교생들의 학교 통일교육 수업방식으로 강의식 교육(47.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시청각 교육(27.6%), 토론식 교육(12.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장학습 중심 교육은 3.4%에 불과하였다. 한편 희망하는 통일교육 수업방식으로는 현장학습 중심(42.7%)이 가장 높게 선호되고 있어 체험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해주었다.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 비율이 41.1%로 불만족 비율 58.9%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현장학습으로 통일교육을 수혜한 학생들의 만족비율은 58.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고교 청소년들은 통일교육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전반적인 관심 부족'(27.6%)을 최우선으로 지적하였다. 이어 '자료 부족'(23.4%), '교육시간 부족'(21.4%), '흥미유발 부족'(15.3%) 등의

순을 보였다. 한편 가장 알고 싶은 통일교육 내용으로 북한주민의 실생활(33.5%)을, 교육에 적합한 외부강사로 '탈북자(새터민)'(51.2%)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한편 2004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정부에서 실시한 금강산 체험학습 참여 경험에 대해 중·고교 청소년 10명 중 9명 이상(97.2%)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경험 응답자는 2.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향후 북한방문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8%가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 기대감을 나타냈다.

[통일연구원 2004]에서도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금강산 방문 등 현지방문 기회 제공'(78.7%)과 '탈북주민·청소년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 제공'(71.5%)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7할을 상회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서적이나 영상, 강의 등을 통한 간접적인 체험보다는 북한 현지방문이나 인적 교류를 통한 직접적인 북한체험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통일연구원 2005a]에 의하면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에 '학교교육'의 항목을 가장 많은 47.5%가 우선적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 '정부의 홍보' 19%, '언론기관의 보도' 16.2%, '부모 및 가족과의 대화' 10.3%, '민간단체의 교육' 5%의 순이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20대의 학생들은 '학교교육' 항목에 평균보다 높은 55.3%를 우선시 한 반면, '부모 및 가족과의 대화'의 항목에는 평균보다 훨씬 낮은 단지 1.5%만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6. 보완설문조사 결과

앞서의 설문결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된 [통일연구원 2005]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먼저 북한·통일문제에 관한 정보획득의 경로로 인터넷의 활용이 언론매체 다음 순의 중요도를 차지하였으나, 청소년의 일반적인 인터넷 활용보다는 낮게 조사되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실 통일부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여 인터넷공간을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3일 "Cyber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를 개통하였고, 산하 기관인 통일교육원은 인터넷 통일교육 잡지(월간)인 "웹진Unizine"(http://zine.uniedu.go.kr)을 2005년 1월 창간하였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국민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yber통일교육센터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통일교육 사이트 중에서 대표적 사이트로 '온라인통일강좌', '청소년통일배움터', '참여마당', '자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화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초등학생으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정보량에 있어서 단연 돋보이는 사이트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재 통일부는 인터넷에 [Cyber통일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온라인통일강좌, 청소년통일배움터 등을 운영하고, 또 통일게임, 도전통일벨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Cyber통일교육센터]를 알고 있습니까?"란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응답학생가운데 98.6%인 206명이 '알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알고 있다'는 학생은 3명(1.4)% 뿐이었다.

또한 "현재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매월 인터넷을 통해 [통일교육 웹진 Unizine]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통일교육 웹진 Unizine]을 알고 있습니까?"란 질문에는 99.0%인 207명이 '알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단지 1%인 2명 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7]

한편 통일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통일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학생통일글짓기대회', '평화통일염원 사진공모전', '사이버 통일4행시 대회', '사이버 도전 통일벨 퀴즈'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행사에 관심이 있습니까?"란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관심이 있으며 참여한 적이 있다' 1%, '관심은 있으나 참여한 적이 없다' 15.3%, '관심은 없으나 앞으로 관심을 가져 참여해 보겠다' 26.6%,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참여할 마음이 없다' 57.1%의 분포를 보였다.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통일비용의 충

---

7 이와 같은 통일부가 개설한 온 라인에 대한 학생들의 적은 관심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시작한 사이버공간들인 '정책제안', '민원신청', '자유게시판' 등에 대한 국민참여도가 크게 증가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당을 위해서 세금징수가 필요하게 된다면, 귀하는 몇 %의 세금 인상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란 질문에 가장 많은 39.2%가 '부담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음 순으로 25.3%가 '5% 미만', 24.4%가 '5~10%', 5.3%가 '20% 이상', 그리고 '11~15%'와 '16~19%'의 세금부담에 각각 2.9%가 응답하였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병행하여 국내에서는 북한·통일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시각이 노정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첨예한 의견대립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자의식이 성숙하고 있는 단계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와 학교선생님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먼저 "북한·통일문제에 관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 시 언론매체 간의 다른 시각과 논조에 의해 혼란스러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란 설문에 19.7%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8.9%이었으며, 51.4%의 학생들이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선생님들에 의한 북한·통일문제 관련 교육 혹은 대화 시 선생님들 간의 다른 시각과 논조에 의해 혼란스러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는 '있다'에 14.4%가 응답하였으며, 42.3%가 '없다' 그리고 43.3%가 '모르겠다'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북한·통일문제에 관한 대화에서 어느 정도의 인식과 시각의 차이를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와 대화 시 견해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란 질문을 한 결과 60.9%가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견해차이가 거의 없다'는 학생은 20.3%였다. '상당히 큰 견해차이가 있다'는 의견에는 5.9%, '견해차이가

조금 있다'에는 12.9%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현재 남북관계가 활성화 되면서 그리고 남북 간에 핵문제 등 여러 사안이 불거지면서 국내에는 개인 및 단체 간에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이념적으로 어느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이념적 성향이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인 54.8%가 '중도'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진보'에 11.7%, '중도 진보'에 14.9%, '중도 보수'에 10.6%, '매우 보수'에 17.9%로 응답하였다(<표 Ⅱ-3> 참조).

<표 Ⅱ-3> 청소년들의 이념적 성향

(단위: %)

| 매우 진보 | 중도 진보 | 중도 | 중도 보수 | 매우 보수 |
|---|---|---|---|---|
| 11.7 | 14.9 | 54.8 | 10.6 | 17.9 |

앞서의 설문에서 탈북청소년들과의 접촉에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선호도 혹은 함께 생활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급에 탈북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한다면 귀하는 어떤 느낌을 가질 것입니까?"란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함께 공부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7.6%에 달했으며, '몇 명은 괜찮을 것이나 수가 많아지면 곤란하다'는 의견에는 33.0%가 그리고 '탈북청소년들은 그들끼리 따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는 19.4%가 응답하였다.

언론매체가 청소년들이 북한・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TV의 북한・통일문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그 유익성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TV에서 방송되는 북한・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72.0%가 ‘있다’고 그리고 28.0%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TV에서 방송되는 북한・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북한・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한 결과 ‘북한・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 14.8%, ‘북한・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 51.0%, ‘북한・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목에 8.1%, ‘북한・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목에 8.7%, 그리고 ‘모르겠다’는 항목에 17.4%가 응답하였다. 즉 65.8%가 북한・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TV의 관련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 7. 평가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평가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는 조사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이해하기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청소년들은 통일 이후 통일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부정적인 것으로 반응하였다. 한편 성인들이 청소년

자신들보다 더욱 청소년들이 북한·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들의 통일관심 제고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성인들과 청소년들 간의 통일관련 시각과 관심의 간극을 줄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은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선호하고 있다. 즉 현재 상황의 북한과의 통일에는 미온적이다. 또한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으로 북한이 변화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핵개발 등으로 인해 북한을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하지 못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의 대북지원 및 경협사업의 지속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개선을 유도하는 바탕위에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포함하는 통일관심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국민 전반이 청소년의 통일관심 제고 방안 으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부모의 역할이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 통일교육의 의미는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은 단기간의 북한 현지방문이나 인적교류를 통한 북한주민(탈북자·탈북청소년 포함)과의 접촉에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학교내 통일교육보다 현장견학·체험학습을 통한 통일교육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학교 통일교육시에 북한지역 방문, 남북한 교류협

력 관련 현장 견학, 북한청소년 및 탈북청소년과의 교류와 접촉과 같은 체험·경험학습 위주의 교육방법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넷째, 청소년들의 북한·통일관 형성에 언론매체와 인터넷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매체가 북한·통일문제와 관련된 보도·방영을 할 때 신중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특히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스스로 이념적 성향을 '중도'라고 밝히고 있어 주변적 환경의 영향에 따라 이념적 성향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매체의 보도·방영시 신중한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인터넷의 활용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통일 관련 사이버공간이 구성되고 운영·홍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통일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마련한 사이버공간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이들의 활용과 관련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 III

# 서독의 청소년 통일관심 제고 사례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미・영・불・소, 소위 전승 4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도발국이자 패전국인 독일의 분단과 그 분단의 극복에 관하여 국제법적인 관할권을 가졌다. 따라서 스스로 통일을 운위할 자격을 가지지 못하였던 서독은 통일교육이 아니라 정치교육이란 이름 아래 서독의 청소년들이 독일민족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지도록 노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 청소년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적 일체감을 가지도록,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 1. 정치교육

### 가. 정치교육의 의의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사례이다. 정치교육은 독일연방공화국, 즉 서독의 국가와 사회질서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원칙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69년「연방정치교육법」 의 제정으로 공고화된 정치교육의 목적은 국민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만드는데 있었다. 구체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비판력과 판단력을 제고시켜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몽'시키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의 일상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토대로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 및 향상하는데 정치교육의 의의가 있었다.[8]

---

8 황병덕,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15~21.

첫째, 계몽이다. 정치교육에 의한 계몽을 통해 정치, 경제 및 사회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립과 갈등은 물론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한다. 따라서 독일국민들은 정치교육을 통하여 사회현실에 대한 분석능력과 아울러 비판적 이성을 통해 사회현실을 인식한 후 자기입장을 설정하는 한편, 나아가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는 능력까지 함양할 수 있다.

둘째, 참여이다. 정치교육은 사회구조 및 제도와 관련하여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을 밝혀내고, 정치적인 조작에 항거할 수 있는 비판능력을 배양한다. 이 경우 정치교육은 사회참여교육으로 진전된다. 즉 인간이 개인운명과 사회발전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할 경우 인간은 정치·사회적 참여를 통하여 사회발전과 아울러 개인운명을 개선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게 되고 정치교육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참여를 촉발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교육은 일반적인 인지교육과는 달리 사회인식의 토대위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천교육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민주화이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는 전쟁 직후인 1945년에서 1949년 사이에 미·영·불 연합군이 서독지역에 설정하였던 비(非)나치화교육과 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한다. 즉 국가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으로, 그리고 지배체제의 권위주의는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적인 교육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근간을 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이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익히고 자신들이 당면해 있는 사회적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교육의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전쟁 이전의 정치교육이 단순히 지배체제의 권위적 강요에 의한 적응교육이었다면, 전후의 정치교육은 자발적인 의식훈련을 통한 의사결정과 참여교육을 통해 선택과 비판의 개방성이 용인되는 민주화된 미래 사회로의 건설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서독은 다시는 나치의 전철을 독일 역사에서 반복하지 않고자 특정한 이념을 강요하기보다 다원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에 중점을 두는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 이전 서독 정치교육의 주된 내용은 민주주의 국가질서 및 사회발전에 대한 이해, 역사적으로나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나치와 같은 극우파와 공산주의와 같은 극좌파에 대한 경계, 서독의 합법성과 현실인식, 서독과 관계있는 주변국 및 세계 주요 국가들에 대한 이해, 유럽공동체 및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실과 문제의 이해, 현재와 미래에 관한 비판적 의식의 고양과 설계 등이었다.[9]

한편 계몽, 정치참여, 민주화에 초점을 둔 정치교육은 분단이란 정치상황에 대해 눈감을 수 없었고, 통일이란 장기적인 민족염원과도 분리될 수 없었다. 이러한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서독의 정치교육에 동독과 관련된 정치교육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특히 1972년 동서독 간에 「기본조약」이 체결되자 구체화되었다. 서독은 현실적으로 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되 동독주민을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하는 「1

9 권오정,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탐구당, 1987), pp. 219~222;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대전대학교 민주시민교육 발표원고, 2005. 6. 21), p. 9.

민족・2국가・2체제」론을 상정하고 동독과의 민족적 동질성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대동독 기본입장을 토대로 학교 정치교육에서 유념되어야 했던, 동서독관계 즉 독일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되어야 했던 내용은 1978년 11월 「독일문제에 대한 서독문부성의 지침」을 통해 알 수 있다. 동 지침은 교육 '권고사항'으로 ①독일 문제는 동시에 유럽문제이다. ②동서독 관계의 발전은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③독일의 분단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④민족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다. ⑤역사적 유산에 대한 책임은 독일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된다. ⑥국경선 양편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공통의 역사, 언어, 문화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 ⑦독일의 국민들은 공동 국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공동 국적을 가지고 있다. ⑧동독의 체제와 서독 질서와의 비교는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 척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⑨동독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인도주의적 의무이다. ⑩인권에 대한 요구는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다. ⑪동독은 서방의 영향력에 폐쇄정책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⑫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은 동독주민들도 독일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⑬동독의 독일인들도 동독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고 있다. ⑭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다. ⑮서독이 독일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등을 규정하였다.[10]

---

10 이러한 권고사항에 바탕을 둔 '보충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독일문제는 특히 역사, 일반사회, 지리, 국어 교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②학생들은 독일 국가(國歌)의 멜로디를 알아야 하며, 3절을 모두 암기하여야 하고, 학생들에게 독일 국가의 역사를 학생들의 연령에 따른 이해 수준에 맞게

## 나. 정치교육의 체계와 운영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주도형의 교육으로서 독일의 전 교육과정에 확고한 뿌리를 내렸다. 정치교육은 국가 차원의 제도교육에서 학교 정규과목으로 배우게 되었으며, 학교 외의 교육분야에서도 국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추진되었다. 특히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한 뒤로 서

---

설명하여야 한다. ③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독일이 분단국가임과 베를린이 옛 수도였음을 알아야 한다. ④역사수업에서는 독일 민족의 탄생과 독일 역사의 주요 사항들, 예를 들어 중세 독일 민족의 이주 역사, 종교개혁, 농민전쟁, 19세기 민족자유운동, 1871년의 독일제국 수립 등을 가르쳐야 한다. 국가사회주의(나치즘)을 다룰 때에는 나치의 팽창정책과 그것으로부터 야기된 동구권에서의 독일 영토의 상실, 독일의 분단 등이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는 특히 상급학년에서 다루어지는데 연합국의 점령으로 인한 독일의 분할, 포츠담 협정, 독일 동부지역(동독)의 분리, 동독지역으로부터 독일인의 추방,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수립, 동서 긴장 관계 속에서 양대 군사동맹(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생성 및 그 의미, 60년대 말 이래의 긴장완화 노력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김나지움 상급반에서는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하여 독일문제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고 심화하여야 한다. ⑤일반사회 교과에서는 동독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적 상황의 주요 특징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직업학교에서는 관련 지식들이 심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⑥지리교과에서는 독일의 정치적 구조와 독일 각 지방의 주요 특징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동구권에 있는 옛 독일 지역의 특징도 포함된다. 특히 베를린과 베를린에 연결된 교통망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동독과 서독의 경제 및 사회를 비교할 때는 에너지공급, 주요 산업, 환경보호, 교통, 관광, 유럽공동체(EC) 및 동구상호경제원조위원회(COMECON)와 같은 경제공동체에의 가입 등의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중등단계의 국어수업에서는 독일 민족의 성립과정에서 문예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시대별로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동독의 문학 작품은 특별히 상급반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기타 다른 교과, 특히 미술과 음악 교과에서 독일문제와 동독의 상황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⑨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평결은 수업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pp. 150~151에서 재인용.

독은 정치교육을 통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독과의 민족적 일체감을 유지하는데 많은 관심을 쏟았다.

또한 1990년 통일을 이룩한 뒤엔 정치교육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구 동독주민과의 정체성 확립에 더하여 독일국민들에게 이젠 유럽인들과의 일체감을 강조하는데 치중하였다.[11] 1992년 12월에 독일의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정치교육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 한 것은 정치교육이 독일인들의 내적 화합과 통합은 물론, 유럽국가 및 국민들과의 화합 및 통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12]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 내외에서 실시되었다. 학교 외 교육에는 취학 전 교육, 학교 외 청소년 교육 그리고 성인교육이 포함된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학교외 정치교육에는 연방내무부 산하의 연방정치교육본부(Bundeszentralde für politische Bildung)와 각 주정부 산하의 주(州)정치교육본부(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정당의 정치재단, 시민대학(Volkshochschule)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체계는 <그림 Ⅲ-1>과 같다.

### (1) 학교내 정치교육

독일 학교에서 정치교육이 하나의 고유한 교과로 출발한 것은 1960년대 정치교육을 위한 교과교수학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이다. 당시 정치교육의 교과교수학적 측면에서 가장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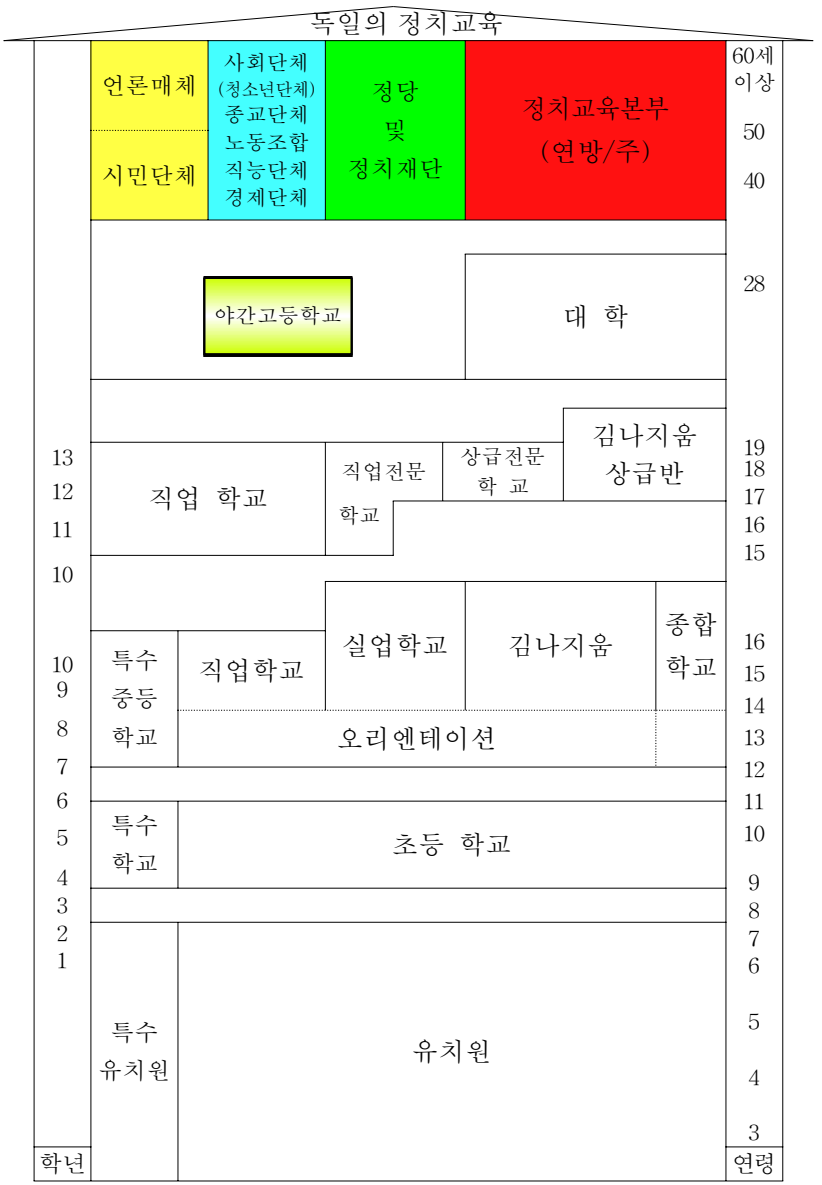
11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p. 10~13 참조.

12 신두철, "독일의 정치교육과 시사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http://www.civilzine.or.kr>.

요한 질문과 이론적 쟁점은 수업에서 “정치현상의 구조적 특징을 어떻게 파악하고 설명해야 할 것인가?”와 “수업에서 민주적 다원주의의 원칙을 어떻게 설정하고 실행할 것인가?”였다.[13]

13 Wolfgang Sander, “Geschichte, theoretische Konzeption und aktuelle Herausforderung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1차 한독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04), pp. 3~18 참조.

<그림 Ⅲ-1> 서독의 정치교육 개관도




출처: 정창화,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김민정 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서울: 엠-애드, 2004), p. 406.

그 가운데 민주적 다원주의를 수업목표의 설정으로 관철시켰던 가장 중요한 기반은 1976년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교육학자들이 남부독일의 보이텔스바흐라는 도시에서 학회를 개최하여 도출하였던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였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특히 정치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갈등과 논쟁에 대한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공통의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최소합의"(minimaler Konsens)라 할 수 있다. 이 합의는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교육적 과제를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신념과는 별개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독일의 정치교육이 추구해야 할 근본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민주적 정치교육의 기본원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 합의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되며, 창안된지 근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견지되고 있다.[14]

첫째, 교화 또는 주입식 교육 금지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생각에 따라 학생들을 조정하여 이들이 자주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해서는 안 된다. 즉 아무도 특정한 의견을 강요하거나 독촉해서는 안 된다. 바로 여기에 정치교육과 교화 간에 차이가 있다. 교화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육목표, 즉 학생의 자율성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

14 Wolfgang Sander, "Geschichte, theoretische Konzeption und aktuelle Herausforderung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p. 21~22; 신두철, "독일의 정치교육과 시사점";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pp. 14~15; 한스-게오르크 마이어, "독일정치교육의 구조와 의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http://www.civilzine.or.kr> 참조.

둘째, 정치적 논쟁과 학문적 논쟁의 지속이다. 정치, 사회, 학문적인 영역에서 논쟁적인 모든 문제는 또한 교육현장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교화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상이한 입장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 선택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화 또는 주입에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고려와 그들의 해결 능력배양이다. 학생은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익 또는 이해관계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력 있게 토론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실제 실시하는 것은 각 주(州)의 과제이다. 학교교과로서 정치교육은 주(州)별로 여러 가지 용어로 지칭되며 교과의 시수도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일부 주에서는 정치교육과목을 5학년 또는 7학년부터 배우게 되는가 하면, 어떤 주에서는 10학년이나 11학년의 고학년에서 시작되었다. 과목시수는 일반적으로 주당 1~2시간이 배당되었다.[15]

### (2) 학교외 정치교육

#### (가) 연방정치교육본부

학교외 정치교육의 대표적 기관인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본부는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설립되었다가 나치체제에서 폐

15 신두철, "독일의 정치교육과 시사점" 참조.

쇄된 “향토봉사를 위한 제국본부”(Reichszentrale für Heimatdienst)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여・야의 합의에 의해 초당적으로 설립된 연방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관이며, 본(Bonn)에 본부를 두고 있다. 한편 각 주정부 산하에는 “주정치교육본부”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다.[16]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초창기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17]

첫째, 분단 상황에서 독일인들에게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한다. 독일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민족적 여망을 인식시킴과 더불어 서방점령군의 협조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과 서방 민주진영에 대한 합류를 실현한다. 동독 공산주의 이념의 확산을 저지하고 자본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교육을 활성화・강화한다.

둘째, 과거 국가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정신을 함양하고, 세계 정세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는 독일국민들이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고 미래 독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는데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서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

16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주정치교육본부는 인력・예산차원에서 완전히 독립적이며 주별로 예산 및 직원의 수에서도 차이가 크다. 한편 주정치교육본부는 각 주에 특정한 설립조건과 주의 문화주권을 고려한 약간의 차별화된 과제설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공동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과 이념의 전파, ②시민의 정치참여 장려, ③ 정치교육 및 그 담당단체에 대한 재정적・물질적 지원, ④정치교육 담당단체간의 협력과 조정의 역할, ⑤출판물과 교육자료 및 매체의 제작・보급, ⑥정치교육 담당자들에 대한 기초교육과 보수교육의 실시, ⑦자체의 고유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허영식, “현대사회의 변동과 시민교육” (2001), pp. 286~287; 신두철, “독일의 정치교육과 시사점”;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p. 18 참조.

17 H. W. Kuhn u. a.,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Opladen, 1993), p. 33; 심익섭, “독일정치교육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연방정치교육본부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논총, 3 (1998), p. 287에서 재인용.

셋째, 전통적으로 국가중심적이고 상명하달식인 독일의 학교교육이 민주주의사회건설에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극복하고자 국민들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국가사회주의를 경험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치의식 고양을 위해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민정치교육이 정부에 의해 주도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가 주도할 경우에 발생할 획일성과 정부에 대한 종속성이 우려될 수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독정부는 연방정치교육본부가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연방내무성 소속이기는 하지만, 내무성과는 예산과 관련한 연관성만을 가진다. 또한 여·야의 연방의원들로 구성된 감독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어떠한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자신의 특정한 이념을 강조할 수 없다. 즉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활동에는 정치적 다양성이 항상 보장되며, 이는 국가가 이념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적 다양성이 가치중립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법치국가의 유지를 기본가치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18]

연방정치교육본부 「주요업무지침」 제3조는 주요업무를 "독일국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통하여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 의식을 확고히 하며, 정치적 협력자세를 강화시키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대별 교육 중점내용을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19]

---

18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 p. 139.

<표 Ⅲ-1> 서독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시대별 교육중점

| 시 기 | 교 육 중 점 |
|---|---|
| 1950년대 | 나치주의 청산, 민주주의 제도와 의식배양, 독일연방공화국의 건설과 운용 |
| 1960년대 | 전체주의체제에 대한 계몽, 과거사 정리, 사회 변혁 |
| 1970년대 | 경제문제, 동방정책(Ostpolitik), 테러리즘, 정치교육의 교과목 및 교수법 개발 |
| 1980년대 | 환경문제, 평화·안보정책, 신사회운동 |
| 1990년대 | 사회주의 청산, 동서독 화합 및 동독주민의 체제 적응, 유럽 통합, 극우주의, 신기술 및 세계화 |
| 2000년대 | 지식정보사회, 이슬람문화 이해, 뉴테러리즘 |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활동은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사업, 출판간행물을 통한 교육사업, 학교내 정치교육 지원, 학교 외 정치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 외부 정치교육단체 지원 등이었다. 이를 통해서 매우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켰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관련된 주제를 교육적·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민이 정치적인 정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20]

통일과 더불어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그 기본방향과 활동내용을 재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독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민

19 신두철, "독일의 정치교육과 시사점" 참조.

20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주요사업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독일연방정치교육본부 (서울, 2001); 신두철, "독일의 정치교육제도와 시사점,"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연례학술대회 논문집 (2003); 정창화,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김민정 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pp. 408~412 참조.

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인식시킨다. 둘째, 동독주민들에게 의회민주주의의 제반 제도에 대한 인식과 민주시민의식을 점차적으로 확산시키며, 서독의 각종 제도를 동독주민들에게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동독주민들에게 시장경제체제의 기능과 운영, 의회중심 정치제도의 구조와 운영, 지방자치제도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을 교육한다.[21]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였다. 1969년도 예산은 약 1,230만 DM이었으나, 1989년에는 100% 이상 증가한 2,800만 DM에 이르렀다. 예산증가는 특히 통일 이후에 급증했다. 제3국으로부터 입국한 독일인 이주자 통합교육을 포함하여 구동독지역 정치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1991년에는 4,310만 DM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 실제로 1990년 한 해만 해도 연방정치교육본부는 3,050여 건의 회의와 세미나를 직접 개최했고, 이를 위해 약 100만 DM을 지출했다. 또한 사회 및 정치단체들의 정치교육관련 회의에 대한 지원액만 해도 27만 DM에 이르렀다.[22]

---

21 허영식, "정치교육의 체계와 운영," 전득주 편, 독일연방공화국 (서울: 대왕사, 1995), p. 377.

22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 Stand und Perspektive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BR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Sonderdruck* (10. April 1992), p. 20;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 p. 144에서 재인용.

### (나) 정당재단 및 기타 사회정치교육단체

독일의 정당들은 전후에 각각의 정치재단을 설립하여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일민주주의의 재건과 공고화에 이바지하였다. 현재 다섯 개의 정당재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표 Ⅲ-2>와 같다.

독일의 정당재단들은 그 업무가 소속정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재정구조와 인사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이들 재단들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이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을 소속정당의 선거활동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선거기간 외에 소속정당의 이념을 홍보하고 소속정당과 합동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3]

<표 Ⅲ-2> 정치교육을 위한 정당재단

| 관련정당<br>재단명 | 설립년도 | 소속정당 |
|---|---|---|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br>(Friedrich Ebert Stiftung) | 1925년<br>(1949년 재설립) | 사회민주당(SPD) |
|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br>(Friedrich Naumann Stiftung) | 1958년 | 자유민주당(FDP) |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br>(Konrad Adenauer Stiftung) | 1964년 | 기독민주당(CDU) |
| 한스자이델 재단<br>(Hanns Seidel Stiftung) | 1967년 | 기독사회당(CSU) |
| 하인리히 뵐 재단<br>(Heinrich Böll Stiftung) | 1997년 | 녹색당(Grüne) |

출처: 정창화,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김민정 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p. 413.

23 심익섭, “독일정치교육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연방정치교육본부」를 중심으로,” pp. 297~298.

정당재단 이외에도 교회, 노동조합, 경제단체, 기타 청소년단체나 구호복지단체 등에서도 정치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회가 학원과 교육시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교회는 관련 교육시설을 통해 쟁점이 되는 시사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교육을 실시한다. 교회의 정치교육은 종교적인 교육활동 가운데 약 10~20%를 차지한다. 교회가 독일민주주의 존립과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책임을 진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24]

독일노총(DGB)을 포함한 각종 노동조합도 근로자들에게 경제 및 사회정책과정, 경영체계, 보험법 및 노동법 관련 많은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에 의한 정치교육은 자발적인 시민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다. 평가

서독이 분단기간 추진하였던 정치교육을 정리・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정치문화인 전통적・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극소화시키고 선진적・민주적 정치문화를 극대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청소년을 포함하는 국민들이 독일민족의 단일성, 독일의 분단과 그 극복을 둘러싼 '독일문제'(German Question)에 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우리에게도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는 정치교육이 중요하며, 분단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북한・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는데, 정부의 대북・통일

24 한스-게오르크 마이어, "독일정치교육의 구조와 의미" 참조.

정책에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정치교육은 통일 이전에는 물론 오늘날 독일의 모든 교육제도에 전반적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어져 학교, 대학, 성인교육, 학교 외 청소년교육, 그리고 직업양성 및 계속교육시설 등에서 정규교육과정으로 확립되었다. 통일 이후에도 정치교육을 민주적 정치문화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 보고 있으며, 그 방법은 이른바 "다원성 내에서의 통합"(Integration in Diversity)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5] 이는 우리에게 통일교육이 학교교육은 물론 학교 외 교육에서도 정규교과목으로, 통일 이전에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편성・실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다만 그 전제는 서독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유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입각하되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연방정치교육본부 및 주정치교육본부와 같은 국가 정치교육기관과 그 외 민간사회단체 정치교육기관 간의 병존은 교육의 과제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독일의 정치교육체계가 갖고 있는 다원주의적 구조를 표현하고 있다. 즉 '민・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전후 나치체제 극복과 독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연방정치교육본부 및 주정치교육본부와 같은 국가적 교육기관이 설치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정치교육의 운영 및 내용적인 면에서도 초당적이며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정

25 신두철, "독일의 정치교육과 시사점" 참조.

치적 자율성과 중립성, 사업의 연속성은 독립적인 조직구조와 연방예산을 통한 안정된 재원확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26]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통일교육을 주도할 국가적 기관이 초당적 지지 및 지원 속에서 중앙 및 지방적 차원에서 구성되어야 하고, 이들이 통일교육을 학교 내외는 물론, 국가기관과 민간사회단체 간의 협력틀 속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말해준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민주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성 내에서의 통합"이 원칙으로 견지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이러한 통일교육 체계의 확립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 추구되어져야 한다.

## 2. 동서독 청소년교류

서독은 분단기간 동안 동서독 청소년 간에 민족적 일체감을 유지시키고자 청소년교류 를 적극 추진하였다. 동서독간 청소년교류 에 대한 이해는 향후 남북한 청소년간 접촉·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제고하고, 남북 청소년간 이질성의 극복과 공동체의식 형성에 응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가. 청소년교류의 법적 기초

동서독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그 사회적 역할은 매우 달랐다. 동

---

**26** 위의 책 참조.

독의 청소년단체는 철저한 국가통제 하에 놓인 공산당 후보자당원의 교육장이었다. 동독에서 사회주의적 인간의 형성을 위한 사회주의의식화 교육은 탁아소 → 소년개척자(Junge Pionier, 초등학교 중심) → 독일 청소년 자유연맹(Freie Deutsche Jugend: FDJ, 중·고등학교) → 체육·기술협회(Gesellschaft für Sport und Technik, 18~21세) → 군대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단체에의 가입은 명목상 자발성을 전제로 했으나, 이런 단체에서 열성적인 활동을 한 자들만이 공산당원으로 발탁될 수 있었고 또 사회·경제적 지위가 보장되었으므로 반강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독에는 각기 다른 정치적인 이념, 세계관에 따라 또는 전문이익집단의 산하에 40개 이상의 청소년단체가 존재했는데 가입은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맡겨졌다. 이들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국가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원되었으나, 국가가 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기구는 아니었다.[27]

동서독의 청소년 대책은 독일문제와 관련된 각각 다른 정치적인 목표설정 때문에 상이하였다. 서독은 상반된 체제하의 분단된 독일에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상호 소외현상이 일어나 민족적인 동질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독일통일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긴장완화, 상호대화 등 양독 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각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의 접촉이 향후 독일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양독 청소년들 간에 사적 교류, 여행, 정치적 논쟁을 벌일 수 있는

---

27 Martin Hülsmann, *Drüben bei uns. Eine Begegnung mit der DDR* (Würzburg, 1986) 참조.

단체들 간의 공식적 모임 등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이로부터 개인적 친분관계가 맺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양독 청소년들 간에 서로를 보다 잘 알수록 그리고 서로 간에 보다 많은 대화가 오고 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적대감 등이 효과적으로 제거내지 해소될 수 있으며, 이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8]

1972년 동서독「통행협정」은 양독간 여행교류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으나, 관광여행과 개인여행만을 취급하였을 뿐 청소년교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청소년교류에 관한 동서독간의 구체적인 첫 협정은 서독청소년단체(Deutscher Bundesjugendring: DBJR)와 동독 FDJ간에 1980년 9월 20일 체결된「청소년 여행에 관한 합의」였다. 민간단체 간의 이 합의를 정부적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1981년 12월 당시 동독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호네커(Erich Honecker)와 서독수상 슈미트(Helmut Schmidt)가 다시 한번 동서독 청소년들 간의 상호 방문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동독의 FDJ와 서독의 DBJR간에 실무협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1982년 9월 20일 양 단체는 양독 간에 청소년여행을 확대할 것이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양측은 청소년들의 이해를 고려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대결이 아니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전제하면서, 양독내 모든 청소년들은 각 나라의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동독의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여행회사인 "Jugendtourist"에게

---

28 Ulrich Bunjes, "Normalität stellt sich nur langsam ein. Zur Entwicklung des deutsch-deutschen Jugendaustausches," *Außerschulische Bildung* (1989), pp. 27~230; Gerhard Kiersch, *Die jungen Deutschen. Erben von Goethe und Auschwitz* (Opladen, 1986) 참조.

그리고 서독의 경우에는 "Deutsches Jugendherbergswerk", "Hansa-Tourist", "Intercontact", "Reisedienst Deutscher Studentenschaften", "CVJM-Reisen" 등의 단체에게 양독 청소년간 여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고 규정하였다.[29] 이에 따라 이제까지 서독 → 동독으로 진행되었던 일방통행식의 청소년방문이 이제 양독간 청소년교류 로 확대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실제 1983년에는 새로운 합의를 근거로 1,220명의 동독 청소년들이 1주일간의 일정으로 서독을 방문하였다. 또한 서독의 청소년들은 약 6,000건의 다양한 기회를 통해 총 22,000명이 동독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16,000명은 1974년부터 시작된 수학여행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물론 모두 서독 → 동독으로의 방문이었다.

1984년 양 독일은 전년도에 비하면 약 두 배 정도의 청소년간 교류를 계획하였고 실제 1/4분기에서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독은 4월 24일 Jugendtourist의 사무국장인 아이흘러(Klaus Eichler)가 관영통신 "ADN"을 통해 동독청소년들이 서독 내에서의 여행중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이유로 청소년 파견을 중단시켜버렸다. 그는 서독의 "헌법소원보고서(Verfassungsschutzbericht) 1983"이 서독을 방문한 동독의 청소년들이 서독 내에서 국가전복 활동을 꾀한다고 중상 비방했고, 동독 청소년들이 서독 내에서 서독 정보기관에 의해 감시되고 있으며, 실제 서독경찰이 동독 청소년여행단을 방해했다는 것

---

29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Innerdeutsche Beziehungen.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80-1986: Eine Dokumentation* (Bonn, 1986), p. 127.

을 이유로 내세웠다.[30]

이로 인해 동독 신교교회 소속 청소년들의 서독방문을 포함한 모든 서독 방문계획이 취소되었다. 1984년 5월 29일 서독의 독일체육연맹(DSB) 산하 독일체육청소년협회(Deutsche Sportjugend)와 동독의 Jugendtourist간에 체결된, 동서독은 지역단체 수준의 체육경기에도 서로 청소년단체를 참가시킨다는 합의에 따른 청소년교류도 모두 중단되었다.

서독의 "헌법소원보고서 1983"이 문제시 되자 서독 내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졌고, "헌법소원보고서 1984"에는 동서독 청소년간 여행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연방내무성장관이 직접 나서서 앞으로 연방정부는 내독간 청소년여행에 장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를 근거로 DBJR 회장인 헬프리히(Rudolf Helfrich)는 1985년 5월 10일 양독간 청소년여행을 조기에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1985년 5월 21일 동독의 FDJ는 이러한 서독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청소년교류를 재개할 것을 밝혔다.[31] 그리고 1986년의 동서독간 「문화협정」, [32] 1987년 9월 1일 서독의 청소년여행 알선기관인 Jugendherbergwerk와 동독의 Jugendtourist간의 「단체여행에 관한 협약」 등이 체결되면서 청소년교류를 위한 법적 토대가 정비되었다.

---

30 *Ibid.,* p. 178.
31 *Ibid.,* p. 217.
32 「문화협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 나. 청소년교류의 현황

서독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청소년교류에 관한 내독간 법적 정비를 토대로 대동독 견학여행을 장려하였다. 서독의 교사들과 학생들의 관심은 계속 늘어나 서독 청소년들이 동독을 여행하는 기회 중에 75%가 수학여행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25%는 청소년단체, 협회 및 기타 사회단체들이 차지하였다. 서독정부는 청소년여행을 교통비 및 체류비 보조란 형식으로 지원하였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참가자들이 여행에 앞서 국경에서 동독의 정치·사회적인 상황에 대해 충분히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 교육용 교재는 전독문제연구소나 정치교육본부에서 제공 -, 여행자의 수는 동독으로의 장기여행의 경우 최소한 7명, 그 외의 경우는 최소 20명~최대 60명이어야 하고, 여행그룹에 미성년자가 끼어 있을 경우 교사나 청소년지도자 등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33] <표 Ⅲ-3>은 연도별로 서독정부의 지원에 의한

제2조 협정당사국들은 학교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및 고등교육, 전문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분야나, 학문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다음의 내용을 장려한다.

1. 경험의 교환, 학문상 정보, 회의나 회담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학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다.
2. 강연, 연구 및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학자들을 교환한다.
3. 학생들의 교환, 특히 대학원생들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젊은 학자들을 교환한다.
4. 전문문헌, 강의자료, 전시자료 및 교수도구 등을 교환한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제기된 활동들의 실천을 위해서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

33 Gisela Helwig, "Jugendaustausch zwischen beiden deutschen Staaten," *Deutschland-Arkiv*, 8 (1984), pp. 804~806; Paul-Ludwig Weinacht (ed.), *Mit offenen Augen in die DDR. Anregungen für Klassenfahrten* (München, 1986) 참조.

서독 청소년·학생들의 동독 수학여행 현황을 보여준다.

<표 Ⅲ-3> 서독정부 지원에 의한 서독 청소년·학생의 동독수학여행 현황

| 년 도 | 수학여행 그룹별 | | | | | | 총횟수 (총인원: 명) |
|---|---|---|---|---|---|---|---|
| | 대학생 그룹 | % | 청소년 그룹 | % | 학생 그룹 | % | |
| 1984 | 45 | 5.2 | 127 | 14.5 | 705 | 80.3 | 877 (22,000) |
| 1985 | 34 | 3.5 | 160 | 16.7 | 709 | 73.8 | 961 ( - ) |
| 1986 | 45 | 5.2 | 136 | 15.7 | 665 | 77.0 | 864 (22,551) |
| 1987 | 64 | 5.7 | 171 | 15.2 | 889 | 79.1 | 1,124 (26,326) |
| 1988 | 71 | 6.5 | 186 | 17.1 | 833 | 76.4 | 1,090 (26,812) |
| 1989 | 62 | 5.8 | 189 | 17.8 | 811 | 76.4 | 1,062 ( - ) |

출처: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3).

한편 서독 청소년단체 중 동독 청소년단체와 가장 활발한 접촉과 교류를 추진했던 단체는 신교교회 청소년단체였다. 여기에는 서독의 신교교회가 대규모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활동을 벌인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양독 신교 청소년단체간 교류는 국가통제 아래에 있었던 동독의 신교단체가 서독 측과의 많은 접촉을 꺼렸기 때문에 거의 서독에서 동독으로 방문하는 일방통행식 접촉이었다. 반면 카톨릭교 청소년단체는 동독지역에 적당한 대화의 상대를 가지지 못해 접촉이 거의 없었다. 서독의 연방내독관계성은 신교단체의 접촉에 대해 조건없이 재정지원을 하였다. 접촉의 방법과 대상선정에 대해서는 신교 측의 재량에 맡겼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신교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했다.[34]

동독정부가 신교 청소년단체에 대해 서독과의 접촉을 허용한 이유는 이러한 접촉을 통해 서독으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고, 교회를 통해서만 접촉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종교활동의 테두리 내에서 동독사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동독청소년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탈출구로 이용함과 동시에, 동독청소년들이 서독의 체제와 접함으로써 서독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부각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신교 청소년단체 간의 교류는 접촉이 공개되면 될수록 동독 측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차후의 접촉 회수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거의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가 없다.

## 다. 평가

동독은 자국 청소년들의 해외여행을 사실상 극히 제한하였다. 서독을 포함한 서방으로의 여행은 물론 사회주의 형제국가였던 동구사회주의국가 및 베트남, 몽골, 북한 등으로의 여행에도 많은 제한을 두었다. 청소년들은 심지어 인접한 사회주의국가였던 폴란드로의 여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외화부족,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의 우려 등으로 인해 동독은 "비사회주의 경제권"(nichtsozialistische Wirtschaftsgebiet, 자본주의국가들 뿐만 아니라 유럽이외 사회주의형제국들도 포함)으로의 여행도 고위관리나 특수계층에만 국한시켰다. 일반인들의 해외여행이 지극히

---

34 Deutscher Bundesjugendring (ed.), "Die unbekannten Nachbarn-Deutsch-deutscher Jugendaustausch," *Jugendpolitik*, 7 (1986), pp. 3~7, 19~20 참조.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해외여행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35]

이러한 동독이 서독 측의 청소년교류 제의에 마지못해 응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에 수반되는 서독으로부터의 재정적, 경제적인 반대급부였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정부는 동독청소년의 서독여행을 체제맹종을 조건으로 한 일종의 포상으로 체제순응을 위한 교육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독은 서독방문 이후 동독청소년들의 사상적 오염을 우려하여 여러 형태의 차단조치를 취하였다. FDJ는 국가의 통제 하에 양독간 청소년들의 만남을 감시하였고, 동독은 2개 민족, 2개 국가론에 의거하여 철저한 이념으로 무장된 동독청소년을 서독체제에 접촉케 함으로써 동서독 분리화를 가속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서독청소년에게 동독여행과 동독청소년과의 교류는 동독에 존재하는 독재체제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는 생생한 정치교육이 되었다. 그러나 동독 사회주의체제의 현실을 체험하고 실망했던 서독청소년들에게는 서독정부가 양독 관계를 심화시키고 민족적 공통의식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도록 양독간 청소년교류 를 추진했던 의도와는 달리 동독과의 상호 이질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통일을 점진적인 과제로 인식하되 민족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대동독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깊은 인식

---

35 Harald Schmidt, *Der Deutsche Jugend-Tourist. Jugendsoziologische Studien über Reiseinteressen und -tätigkeiten junger Leute aus Ost- und Westdeutschland 1989/90* (Berlin, 1990), p. 18.

또한 서독청소년들의 내면에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동독도 정치적인 목적, 즉 청소년단체 핵심간부에게 서독에서의 현실체험을 통해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를 깊이 체감시키려던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동독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이 내부적으로 붕괴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독의 사회체제를 체험할 계기를 가졌던 동독의 청소년들이 훗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중심세력으로 성장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분단국간 청소년교류가 함축할 수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한다.

# Ⅳ

# 청소년 통일관심 제고 방안

## 1. 민주시민교육[36]으로서 통일교육 강화

정치교육은 구체적으로 정치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의식을 함양하며, 정치참여의 능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압축된다.[37] 이렇게 볼 때 통일교육, 국민정신교육, 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환경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정치교육으로 수렴될 수 있다. 통일교육의 경우 특별히 분단국내에서만 존재하는 정치교육의 일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일교육은 "분단국가를 통일시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통일대비교육"[38]인 동시에 "통일 이후 (흡수통일이나 합의통일의 경우 기존 교육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정립시켜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 통일완수교육"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통일 이전 상황에서 수립되어 통일과정을 주도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체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통합의 완성을 지향한다.[39]

서독의 정치교육은 분단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사회주의의 환영을 탈피하여 민주주주의를 깊숙이 뿌리내리려는 두 과제를 달성하려는 초석이었다. 정치교육이 여・야간 초당적 합의에 의한 국가주도적인 통치(government)의 차원에서 시작되었

---

36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에 관해서는 심익섭,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논리," 김민정 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pp. 12~22 참조.

37 신세호 외,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p. 51.

38 정용길, "동서독 정치교육의 비교," 분단국 통일론 (서울: 고려원, 1989), pp. 86, 90~91 참조.

39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pp. 3~4.

으나, 시대적 변화와 조류에 상응하여 민·관간 긴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추진되는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로 성공리에 진전됨으로써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민주시민의식은 다시 독일의 시민적 정치문화를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상승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종국에는 통일과 통합을 원활히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독일의 사례를 시사점으로 한 우리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실시이다. 민주시민교육으로서 독일의 정치교육이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분단을 극복하는데 크게 공헌한 사례를 앞서 살펴보았다. 우리에 있어서도 통일교육의 방향성은 통일교육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미래의 통일주역이라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현재 그들이 사회변동의 중추적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현재와 미래를 함께 지향하려는데 두어야 한다. 즉 통일을 위한 미래지향적 인간형을 창조하려는 교육과 더불어 민주시민적 소양과 인성을 지닌 현재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품성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함께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40] 이렇게 볼 때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호 긴밀히 연결·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둘째, "한국적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채택이다. 남북관계가 발전되면서 국내적으로 정치지향성에 따라, 각자의 이해관계 및 개인적 체험에 따라 현재 북한·통일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학교 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 학계,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가

40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 p. 25.

한 자리에 모여 통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성 내에서의 통합"을 실천하려는 한국적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이룰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한의 합의"는 곧 체계적인 자료축적 및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통일교육의 교재로 사용 중인 각종 관련 자료에 대한 평가작업, 교수방법에 대한 평가작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가기관으로서 "한국통일교육본부"(가칭)의 구성이다. 한 국가가 민주주의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관점과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하면서도 통합성을 가진,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중립적인 교육기관, 한국통일교육본부와 같은 기관의 설립이 요청된다.[41] 독일에 있어서 학교 내외 정치교육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한국통일교육본부가 독일의 연방정치교육본부와 같은 위상과 역할을 가지는 것이다.

한국통일교육본부의 설립단계에서는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이 기구가 체계화·안정되는 대로 점차 축소되어서,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42] 한국통일교육본부의 설립은 현재 사회통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교육원」과 북한·통일연구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의 기구·기능을 확대·재편하

41 신두철, "독일의 정치교육과 시사점" 참조.
42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p. 20.

는 토대 위에 통일교육관련 전문가단체인 「통일교육협의회」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다.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 항상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부와 민간차원의 협력, 민간사회교육기관간의 협력, 사회교육기관과 학교통일교육간의 협력체계 구축 문제이다. 이것은 통일교육을 추진하는 각 주체별 단선적 접근 전략보다 종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접근방법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영역이 단순히 한 단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학업과 관련된 학교, 학원 등의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대중매체, 친구를 비롯한 다양한 매개체가 그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 관련 종합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된다.[43] 한국통일교육본부는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점으로 역할할 수 있다. 한국통일교육본부의 설립과 아울러 주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통일교육본부의 설립이 추진되어야 하며, 중앙본부는 각 지자체 교육본부와 종합 거버넌스 구축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독일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정치적 자율성, 중립성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은 독립적인 조직구조에 더하여 연방예산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한국통일교육본부가 본래적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조직구조적 독립성과 재정적인 안정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의 초당적 지지 속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의 연방정치교육본부와 같이 한국통일교육본부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재정

43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 pp. 52~53.

지원을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지원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투입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통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주관 기관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인한 수강자들의 혼란이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 참여 기관간의 이념적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재정 지원과 전문인력의 활용 방안, 기관간 정보・자료 등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등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44] 한국통일교육본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통일교육단체 간의 갈등과 이념적 편차를 조정하고 민・관의 시각차를 줄이는 역할, 구체적으로 정부의 파트너(partner) 역할, 정책제언자(advocacy) 역할, 민・관의 완충 역할 등을 담당할 수 있다.[45]

넷째, 통일교육 시간의 확대이다. 우선 학교내 통일교육이 강화・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통일교육은 사회, 도덕, 국어 등 여러 교과목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 현재의 교과목들에서 실시되는 통일교육의 시간이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통일교육을 독립교과목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윤리나 도덕과목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던 과거사로 인해 이들의 과목이 폐지되거나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으로, 미래지향적인 통일세대로 성장시키는데 여・야나 국민들이 합의한다면, 한국적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단일교과목으로서 통일교육의 신설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44** 위의 책, pp. 188, 193.

**45** 곽태환 외,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과 발전방안 (서울: 통일교육연구소, 2004), pp. 37~39 참조.

다음으로 학교 외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각종 교육기관이나 단체의 교과과정에 통일교육 반영 시간을 확대하되,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6]

다섯째,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은 통일교육의 실시이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불만족도가 만족도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방안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하다. 특히 청소년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통일교육방법으로 제안하는 북한지역 견학 등의 현장교육활성화와 남북 청소년교류, 탈북주민・청소년과의 교류 등이 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산 교육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탈북청소년과의 대화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북한사회를 바로 아는 것도 통일교육의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대중매체에서 북한의 현실을 보도・방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북한사회를 바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북한 사람과의 만남이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살았던 사회를 알아갈 수 있다. 특히 북한처럼 폐쇄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정보를 습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그 정보의 신빙성은 여러 측면에서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북한 현실에 살아온 탈북자들의 삶의 이야기는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이다.

---

**46** 위의 책, p. 152 참조.

또한 남북한 직접 교류에서 부딪치는 한계점을 탈북자들과는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동서독간의 교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서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목표를 두었지만 동독은 체제선전을 통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남북한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산가족, 미녀응원단 등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직접 교류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란, 그리고 마음을 터 놓고 북한청소년들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힘들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선전하러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을 떠나 한국사회에 오면서 어느 정도 북한 체제에 대한 모순점을 이해하고 있고, 현실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교류는 남북 청소년간의 직접교류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많은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통일 시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의 수도 상당하여 탈북자 전체의 20%에 이른다. 7,000명을 상회하는 탈북자 가운데 1,400여 명의 탈북청소년들이 주변에 있다. 현재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행사들, 예를 들어 통일캠프나, 수련회 등을 통해 이들 탈북청소년들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고 서로 친구를 맺음으로써 작은 남북교류, 통일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47]

여섯째, 통일문화적 차원에서의 통일교육 실시이다. 청소년들은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교통일교육이나 교사보

---

47 문해성, "남북 청소년교류의 활성화 방향 및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독 전 동·서독간 청소년교류가 남북청년 교류에 주는 시사점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차 청년위원회 발표자료집, 2005. 9. 30), pp. 47~48.

다도 신문, TV,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가 더욱 크다고 응답한다. 결국 이는 통일교육이 단순히 인지적 영역에서 지식을 암기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체험해 가는 "통일문화적 접근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 2. 청소년 통일문화의 형성

### 가. 청소년의 정체성과 통일관

현재의 청소년들은 70, 80년대의 청소년이 아니다. 이들은 정보화의 파고 속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한, 체험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특히 정보화는 청소년들의 주체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이기도 하면서 사회적 모순을 겪어내는 사회 내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소비·상업주의화 과정은 학교와 학교 밖의 차이를 극명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기존의 가치관에서 보면 일탈적인 행동들도 매일 신문지면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기성세대와의 구별짓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어른들은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하다. 세대간 단절은 심각하게 진전되어 부모-자식, 선생-학생 사이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정체성은 흔히 "신세대" 혹은 "N세대" 등의 통칭 규

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층은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청소년이 “세대 정체성”(어른들과 구분되는 자신 세대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개인 정체성”(같은 세대 내에서의 차이로 규정되는 정체성)이라는 문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세대 내에서 계층, 성, 취향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른 분할도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의 세대 정체성을 통칭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왜 그들이 자신만의 색깔내기에 몰두하는지, 또래 사이에서 자신을 차별화하고 싶어하는 청소년의 욕망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상당수의 청소년이 정보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역으로 상당수의 청소년은 정보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나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체성 변화는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최근 남북문제의 쟁점화 과정에서 청소년교류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변화된 청소년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려없이 기성세대의 통일관에 입각하여 그들의 머리로 청소년들의 교류문제를 이야기한다. 이런 식의 논의와 협의를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겠는가는 상당히 의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 기존의 패러다임이 통용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어른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제안되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통일문제에 관해 청소년 자신의 주체화가 상실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면에서 기성세대가 만들어 온 통일관련 질

서는 청소년에게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현실이 보여주는 사실은 젊은 세대의 삶에 준거하지 못하는 통일관련 이야기가 냉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통일문제의 설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정의되는 통일의 상,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설정되는 기준으로 청소년과 소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세대간 이해와 소통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최근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기존 관념을 단순히 강화하는 계기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가 어떠한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통일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다. 청소년들과 대화해 본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라는 의미와 '공존'이라는 의미 사이의 차이가 중요할 수도 있다.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식의 관념보다 서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기존의 '통일'이라는 의미 속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강한 의미의 통일 관념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접근하는데 오히려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통일이라는 의미 자체가 기존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분할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나. ‘일상’ 그리고 청소년 통일문화

청소년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감정 자체를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 그들은 “통일이 싫다”고 말하며, “통일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할 줄 안다. 그들은 통일에 대해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민하면서도 당위로서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세대에 비해 개인적으로 조금은 자유로운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은 통일이 나에게 무엇인가가 설명되지 않고서는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통일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통일의 과제를 일상에 위치 짓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껏 통일은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국한되어 논의되었고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언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통일은 민족적 과제로 위치 지워지든 아니든 일상과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었다. 통일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큰 이야기로, 나의 일상과는 무관한 정치적 차원의 이야기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의 문제를 ‘일상’에서 체감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은 나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생활세계를 복원하는 과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의 과제는 일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를 분할하고 있는 내적 분단, 혹은 마음의 분단을 치유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분단 사회 속에서 ‘우리’와 ‘너희’를 나누고 ‘적’과 ‘동지’를 나누는 이분법적 논리와 배타성의 논리에 우리는 익숙해져 왔다. 생존을 위해 너와 나의 대립을 항상 설정하고 적과 동지의 이분법을 작동시켜왔던 것이 분단 사회의 조건이었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통일의 문제는 일상의 문제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통일문제의 접근 노력은 바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적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위한 연습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 할 때 청소년층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 사회문화적 측면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구주의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문화를 도구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통일교육과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통합의 문제 설정은 단순히 문화 이벤트를 벌이거나 문화적 행사를 매개로 하는 수준에서 위상을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통일문제를 일상과 연관시킬 때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가 통일의 문제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청소년들이 깨닫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줄 세우는 문화나 왕따 문화,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의 문제 등은 동질성에 대한 강박관념과 위계에 대한 집착이라는 사회과정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은 '타자'를 만나고 소통하는 능력과 비례하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이 거대한 타자(북한 사회구성원)를 만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일상을 바꾸지 않고서 통일이라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특히 통일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불가피한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연변 동포,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의 문제에서 드러난

바 있는 것처럼 타문화 혹은 타자와의 관계능력, 혹은 의사소통 능력의 부재는 현실적인 문제로 존재한다. 문제는 한국사회 내에 자리잡고 있는 기준을 상대화하고 성찰하지 않고서는 통일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은 청소년 일상생활 속의 '문화'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의 "통일문화" 형성 속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도록 접근되어야 한다.

통일문화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통일문화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에서 사회구성원이 다 같이 지향해야 할 신념, 가치체계, 행동양식으로서 통일한국의 이념에 부합되는 민족문화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과정을 통해 분단된 사회문화구조에서 파생되는 남북한간 이질화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게 하는 실천적 기능을 지닌 문화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일문화의 개념은 결국 통일국가의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와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이질화 해소라는 두 측면을 연결시키는 규범 및 그 실천정책의 창출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48]

### 다. 청소년 통일문화의 특징

현시점에서 새로운 통일문화의 형성은 과거에 이념적, 체제적 접근과 통일단계에만 집중되어 있던 통일논의의 접근방식을 탈

48 길은배,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pp. 13~20 참조.

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이것은 세계의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경제, 사회문화, 정보 등과 같은 새로운 요인을 중심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변화의 축과 맥락을 같이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통일논의는 과거의 폐쇄적·일방적 형태를 벗어나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대적 환경을 담아야 한다.

사실 통일문제는 시대에 따른 정치적 환경변화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환경은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통일교육의 방향을 규정하고 나아가서 그 성과의 양과 질까지도 제한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통일에의 진지한 접근을 위해서, 특히 청소년의 통일관 재정립을 위해서 정치적 민감성에 기인하는 환경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현실의 정치를 비롯한 제도·교육 등 모든 문제가 통일문제와의 관련에서 합리화되고 또 동원되는 사례를 자주 보아 왔다. 통일문제와 관련한 청소년의 동원 또는 주변인으로서의 역할 부여가 그것이다. 그러나 통일에의 진지한 접근을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적 제약의 악순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통일문제에 대한 종래의 인식과 태도를 새로이 가다듬어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현실의 요구와 통일의 당위적 명제를 양립시키는 일종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새로운 통일문화 형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통일문화 형성의 시대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재까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로 특정 계층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통일논의는 광범위한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통일문화를 형성하는 과정 속

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사회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 과거 정치·군사적 측면에 편중되었던 통일의 접근방식을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변곡점을 형성해 준다. 즉 통일의 접근방식이 외형적, 제도적 차원에 머물렀던 인식을 사회문화적 통합이라는 다분히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으로 전이·확대시킬 수 있다.

셋째, 남북한 간의 대립·경쟁을 극복하고 조화점을 찾음으로써 통일 이전의 남북한 체제가 지향해야 할 이념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즉 남한과 북한의 기존체제 하에서 나타났던 상극성을 해소하고 서로의 장점들을 부각함으로써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장해줌으로써 전체사회의 다양한 하위문화간 내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계층, 직업, 성별, 세대, 지역 간의 격차를 초월하여 남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통일문화 유형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통일문화 형성은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통일이라는 문제가 딱딱하고 특정 사람들만의 점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의 한 부분적 형태로 청소년층을 비롯한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통일문제는 거대 담론 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바, 이것은 그 누구도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는 하나의 성역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특정 계층만의 점유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문제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 담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통일이라는 조급한 당위적 책무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서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준비단계부터 시작하여 보다 높은 단계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 통일문화의 본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와 '과정'을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진정한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하여 지향해야 할 문화체계인 동시에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적 문화해소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치 정향을 갖는다.

둘째, '규범'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연결시키는 개념으로서 통일국가가 지향해야 할 청소년의 규범적 문화체계인 동시에, 이를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확산하고 남북한 문화의 공동기반을 확인·확산시켜 나가는 청소년 통일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실천적인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분단에 의해 왜곡된 문화구조의 극복을 현재적 과제로 삼되, 이를 분단현실의 틀 안에서만 한정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청소년 통일문화의 창조라는 미래적 시각에서 조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전통적'인 것과 '발전적'인 것, '특수성'과 '보편성'을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전통적인 문화유산 가운데 잔존하는 동질성을 확대·발전시키는 것과, 특정 계층 및 지역 청소년의 가치 정향

을 넘어서 모두가 공유하는 일반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청소년 통일문화의 본질은 오늘의 청소년들이 막연히 미래의 통일 주역이라는 당위적 관점에서 벗어나, 현재부터 청소년들의 통일관 형성과정에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남과 북을 이질적인 이분법적 시각에서 재단하고 차별화 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새롭게 공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소년 통일문화는 단기적으로 형성될 수 없음과 동시에 강제적 성격을 띠어서는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초기단계에서는 정부 및 시민사회 차원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나, 어느 정도의 환경이 조성된 후에는 청소년들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방향성을 갖고 후원될 필요성이 있다. 한 개인의 의식, 가치관 등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 획일적 개성을 빚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상정하는 청소년 통일문화는 북한이라는 대상이 존재함에 따라 획일적 가치관보다는 문화적 상대주의나 다문화주의 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인간형과 사회이다. 그러므로 자칫 새롭게 시작되는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 과정이 모범답안이 존재하는 획일적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라. 청소년 통일문화의 형성 방안

### (1) 기본방향

청소년 통일문화를 바람직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현재의 단계부터 정확한 목표와 세부적인 실행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은 무엇보다도 정치·군사적 환경에 의하여 그 접근 시각이나 도출해 내야만 하는 결과가 강하게 영향 받는 현실을 비판한다. 이것은 통일문제라고 하는 본래적 속성이 정부의 정책과 일관된 맥락을 유지해야 된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기본원칙의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단기적 성과에 치중되어 진행되는 것에도 부분적 원인이 있다. 특히 그동안 통일문제는 북한이라는 폐쇄적·통제적 사회에 대한 정확한 관련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당위적 목표를 설정한 후에 사건이나 환경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그 과정을 수정해 가는 졸속적·미시적 접근 방법에 기인한 바도 크다.

그러므로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의식과 가치관을 비롯한 사회환경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미래지향적 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종합적 고려 없이 단기적·선전적 결과에 치중하여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에 그동안 많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통일과 관련된 문제의 반복적 악순환이 거듭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남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일상생활 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통일문화의 내용과 가치 정향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둘째, 통일관련 정책수립 및 제 논의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은 기성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향후 통일시대의 주도적 사회세력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의 몫이기도 하다.

셋째, 현재 남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존재하는 동질적·이질적 요인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가치 정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목표가 정확해야 한다. 이 목표에 맞게 청소년 통일문화상을 확립하고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동을 이끌 수 있는 사회적·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49]

### (2) 추진방안

우리 사회는 그동안 통일문제와 관련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남북경협, 이산가족 상봉, 예술단교환 방문 등과 같은 오늘의 성과를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적 성격의 성과가 진정한 사회문화적 통합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가정은 섣부른 예측에 불과하다. 그러한 성과들은 당장에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으나, 지속사업으로 연계되지 않을 때 곧 잊혀지는 역사적 사건에 머무를 수 있다.

---

49 길은배, "청소년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미발표 원고, 2005) 참조.

그러므로 진정한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통일문제가 특수한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정착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종의 법·제도적 구비와 더불어 교류협력과 같은 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더불어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통일상황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내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 지원사업은 남북한 주민 간에 실질적 접촉은 없으나, 이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통일문화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고, 관련 지식을 별도로 습득해야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생활세계의 일반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정보·지식사회의 선도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앞으로 점점 더 딱딱하고 난해한 문제들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통일문제가 현재와 같이 특별한 문제로 인식될 경우에 그것은 기성세대만의 담론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청소년내 통일문화의 형성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사회통합 가치의 창출이다.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갈등·혼란 극복방안으로 젊은 세대에 대한 '관용성' 증진 및 '리더쉽' 함양 교육이 정부 및 시민사회차원에서 마련·추진되어야 한다. 전혀 다른 사회문화 및 정치적 토양 속에서 성장한 남북 양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통일에 다가가는 환경 속에서 갈등과 혼란

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타자를 수용하거나 포용할 수 있는, 민주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각 개개인이 시민적·사회적 소양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이 현재 진행형임을 체득케 한다. 청소년들에게 통일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피부에 와 닿게 느끼도록 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즉 지금도 통일이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들을 청소년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특구에서 활동하는 관련 기업에 청소년들을 견학케 하는 등 현재 남북 교류협력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나아가 캠프나 수련회 등의 형태로 탈북청소년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도 통일이 바로 현재의 일임을 깨닫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Mentor 사업의 확대·강화도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 개인들간 보다 학교나 시민단체 혹은 종교단체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자문과 협력을 구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탈북청소년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게 하고,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정착문제, 통일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통일독일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 등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남북한 청소년교류도 큰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들이 통일과 남북관계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재의 한반도 통일문화를 실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바로 남북한 청소년들의 직접 교류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사이버공간을 통한 통일문화의 창출이다.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사이버 공간도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자리매김했다. 오프라인에서의 분위기 조성이 한 부분이라면, 사이버 영역(온라인)에서의 분위기 조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최근의 청소년들은 오프라인의 세계보다 사이버 세계에 침잠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통일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사이버 세계를 통일문화의 장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과 통일을 주제로 한 게임 개발, 사이버 통일 표어・포스터 대회, 사이버 북한 답사 등의 게임 개발과 행사 개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이버공간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시각과 관심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넷째, 통일교육시스템의 홍보 강화이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통일교육시스템과 시설 및 내용들은 상당부분 잘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활용도는 크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즐겨보는 책자, 인터넷 사이트 등에 통일교육과 관련된 배너를 달아 주는 것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머리 속에 어느 곳에 가면 북한・통일문제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일반 상식으로 자연스럽게 각인되게 하여 이들 매체 및 자료・정보의 활용과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통일부가 갖은 노력으로 마련한 사이버공간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섯째, 각종 동호회 모임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축제의 개최이다. 청소년들의 취미활동, 동호회 모임활동

을 활성화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체성의 강화・확산에 점진적이지만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동호회를 결성하게 하여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서동호회, 영화동호회, 음악동호회, 미술동호회, 탈춤동호회 등 다양한 형태의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문화예술축제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 음식축제의 개최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인의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정(情)을 매개로 한 관계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인에 있어서의 음식은 정을 베푸는(input)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인에 있어서의 공식(共食)은 공생(共生)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음식을 주제로 혹은 소재로 공동행사를 하는 것은 자기의 정을 상대에게 베품으로써 그 반응(output)으로서의 상호간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직접 북한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만들어봄으로써 북한음식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기들이 만든 음식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북한음식에 대한 친밀감과 애정을 갖도록 한다. 진행방법으로 먼저 음식장터의 메뉴를 북한음식 중에서 정하고 조별로 북한음식을 하나씩 정해 음식을 만들고 각 코너에서 그 음식을 홍보하고, 음식을 판매한다. 북한음식과 가장 근접한 코너, 호응이 가장 큰 코너 등 맛보다 북한음식 체험 쪽에 기준을 두고 심사하여 시상을 한다. 그리고 음식 만드는 조, 홍보 조 등으로 분담하게 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토록 유도한다. 또한 만드

는 음식종류나 방법에 관하여 북한음식점에 문의도 하고, 자료도 찾고 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여섯째, 청소년 학교, 청소년 포럼의 개최이다. 청소년 학교, 청소년 포럼은 시민학교, 시민포럼과의 유기적인 연대 하에 일상생활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제로 한다. 청소년 학교는 정규 학교와의 유기적인 연대 하에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통일문화의 선도자로서의 청소년 교양에 역점을 둔다. 즉 청소년 학교는 교육의 목표를 평화교육, 민주교육, 시민교육에 두어야 하며, 보다 많은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학교 수료증 등을 교부하고, 이를 학교교육에서 인정하는, 즉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갖춘다.

또한 청소년 포럼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을 주제별로 보다 구체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 청소년 자유포럼, 남북한 청소년 인권포럼, 남북한 청소년 평화포럼, 남북한 청소년교류 포럼, 남북한 청소년 역사포럼, 남북한 청소년 미래포럼 등 각각의 주제별로 세분화하여 구성・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대중매체의 객관적 보도이다.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에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방송과 언론매체임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한 사회에서 대중매체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공통적인 결과의 하나는 청소년들이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습득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방송과 언론은 청소년의 통일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국민적 갈등은 언론의 태도에 의해 상당히 좌우된 면이 없지 않다. 통일이라는 당위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특정의 정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킴에 따라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언론의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단면이기도 하다. 언론은 바람직한 목적에 맞는 보도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특히 비판 능력이 다소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이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기성세대들이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한다면 편견이나 오해를 조장하는 일은 피해야 할 일이다.

그외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대중매체와 연예스타의 활용이다.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한 연예스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예스타들이 참여하는 통일이해 관련 드라마 방영, TV 광고, 이들이 참여하는 행사의 지속적 개최, 이들을 통일홍보대사로 내세우는 홍보전략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행사의 권위 제고이다. 대학입시는 청소년들이 피할 수 없이 거쳐야 할 현재의 대한민국 문화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퀴즈대회 등의 행사를 권위 있게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상 혹은 국무총리상 등을 표창하고 이것들이 학생들의 대학입학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50]

---

50 1998년 탈북, 1999년 입국하여 현재 대학생이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생 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문해성과의 면담 (2005. 10. 8).

### 마. 남북한 청소년교류

남북화해협력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이 물꼬를 트고 있다. 현 시기에 온 국민이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남북한 간의 접촉・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심화시켜 신뢰감을 형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남북한이 협력하는 평화번영의 시대를 현실화 하는 일이다.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의 결과 남북한 주민들에 내재된 이질성을 극복하여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접촉・교류・협력의 주요한 형태이다. 앞으로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부담까지도 짊어져야 할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서로 만나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청소년교류의 의미가 민족공동체 형성이란 측면에서 절대 과소평가될 수 없다. 통일에의 길이 분단 상태의 극복과 해소라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따라서 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남북한 청소년교류는 남북청소년 모두에게 통일의 의미가 무엇이며, 남북 교류협력이 왜 필요한가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통일과 교류협력이 '일상'임을 체감케 하는 계기가 되어 청소년의 통일문화를 자연스레 형성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독일과 한반도는 역사적, 사회적, 국제적 맥락에서 상이성과 유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시키려 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교류와 관련하여 양 지역상황의 차이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정책이 남북한 평화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한 교류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접촉·교류·협력이 평화적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던 독일의 역사적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국내외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동독정권의 부정적 혹은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대동독 청소년교류정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서독정부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긴장완화란 국제정치적 흐름 속에서 동독과 최소한 "적대적 협력"(antagonistische Kooperation)[51] 관계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을 정립하고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rung)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독일정책을 국제사회, 특히 독일분단의 관리와 극복에 관해 국제법적 권리를 가졌던 전승4개국이 용인하거나 지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교류협력의 제도적 틀을 형성했던「기본조약」과 동독과의「문화협정」 등 분야별 협정체결은 서독정부의 이러한 국내외적인 정치적 노력의 산물이었으며, 동서독간 청소년교류는 이러한 제도적 틀의 확립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었다.

---

51 손기웅, "베를린 선언의 의의와 과제," 베를린선언과 남북관계,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2001-01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8~12 참조.

둘째, 독일의 사례는 동서독과 남북한 상황의 차이를 감안하여 정부가 청소년교류정책의 세부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특히 동서독간 청소년교류 협력의 활성화가 양독일 간에 합의된 법적 제도화에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 간에도 향후 협의될 수 있는 청소년교류 관련 협정과 구체적인 문건을 지금부터 준비해 놓아야 한다. 특히 청소년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남북간 「문화협정」의 체결에 대한 대비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서독의 경우 민족적 동질감을 인식시키기 위해 추진된 청소년교류가 비록 동독현실에 대한 실망감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얻은 측면이 있으나, 분단현실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체제의 선전을 위해 추진했던 동독의 경우에는 선발된 청소년들이 오히려 서독체제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중요한 사실은 동서독 청소년들 간의 만남이 상호 현실 및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비록 정치성을 가지는 만남일지라도 남북 청소년들 간의 대화를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금강산방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활성화하여 분단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조국강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52]

---

52 다만 수학여행의 경우 설악산관광권의 경제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악산-금강산을 연계하는 수학여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

넷째, 남북한 청소년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 제정이다. 현재 청소년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벗어나 좀 더 진전된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권장 장치가 필요하고, 교류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청소년교류 협력 활성화 촉진 특례법」(가칭)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의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소년교류 협력을 위한 남북회담"을 개최하는 등 청소년들의 교류와 접촉을 위한 많은 시도와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북한관광을 실시하고 남북경협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교류 추진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섯째,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민반관' 형식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가 모든 청소년교류 사업을 포괄할 수 없고 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 예를 들어 다양한 민간사회단체를 통한 -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교류 관련 기구·단체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활성화·지원하는 「남북청소년교류협력위원회」 (가칭)를 반민반관의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한다. 남북청소년교류협력위원회의 목적은 남북 청소년교류와 관련하여 상호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활성화하는데 있다. 청소년교류의 경험이 참가자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청소년교류의 활성화가 통

---

람직하다.

일의 분위기 조성, 통일문화 형성의 밑거름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되돌려지고 공유되어야 하며, 남북청소년교류협력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의 무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향후 북한과 체결할 청소년교류 관련 협정이나 문건을 토의하는데 뿐만 아니라, 청소년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53]

여섯째,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의 의미를 가지는 추가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동서독의 교류에 있어서 서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목적으로 교류를 진행시켰지만, 동독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체제선전적이고도 일종의 체제보상적인 의도로 교류를 추진하였다.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교류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남북 청소년교류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다발할 것이고, 이를 아무런 준비 없이 받아들인다면 남한의 청소년들은 이질감으로 인해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 북한의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우리의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남북 청소년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청소년교류에 참여함에 있어서 단순히 행사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통일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교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교류를 위한 통일교육에는 북한의 실정과 북한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고가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

---

53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하에 "청년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권이종, "통독 전 동·서독간 청소년교류가 남북청년 교류에 주는 시사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독 전 동·서독간 청소년교류가 남북청년 교류에 주는 시사점, pp. 1~5 참조.

한 정확한 이해야말로 남북관계를 '경쟁'에서 '협동'으로 가고자 하려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의 제시가 통일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남북교류와 관계개선, 그리고 통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정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만 청소년들이 교류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 청소년교류의 추진방법상의 방안을 동서독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교류는 전반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동질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독일사례에서 보듯이 청소년교류는 체제유지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성사되기 힘든 문제이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이념적 갈등의 골이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사회문화적 교류의 정치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는 또 다른 교류협력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접근방법, 분야선정 및 추진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청소년교류에 있어 경쟁적·대결적 태도나 체제우월성을 과시하려는 냉전적 기획, 그리고 상대방에게 문화적 자극과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 등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들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탈냉전적·평화공존적 시대적 맥락에서 상호 가치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 및 상호 인정의 열려 있는 교류협력의 틀을 확립하는 데에도 커다란 장애가 된다.

다음으로 동독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청소년교류에 제한적·소

극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연, 전시회, 운동경기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 북한에서의 개최빈도와 남한에서의 개최빈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내에서 만의 개최조차 수용할 수 있다는 탄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교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경우에도 북한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남한이 좀 더 많은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류의 유지와 지속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일방통행식의 교류가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가지되 차별적이기는 하나 상호적인 이해관계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야선정의 경우 가능한 한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부문, 북한이 상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좀 더 쉽게 응해 오리라고 여겨지는 부문, 혹은 교류를 통해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부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독일의 사례에서도 체육교류의 경우 동독이 자신 있어 하는 부문, 공연・전시회 등을 통한 청소년교류의 경우 동독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가질 수 있는 부문 등을 서독이 교류협력의 분야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 V

# 결 론

현재 청소년들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는 조사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이해하기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들은 통일 이후 통일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는 결국 청소년들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들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강화이다. 서독의 경우 정치교육이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독일민족의 단일성, 독일의 분단과 그 극복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는 통일교육이 분단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북한·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는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통일교육의 추진에 있어서는 민주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성 내에서의 통합"이 관철되어야 하며, 교육시간도 법적 제도화를 통해 확대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을 독립교과목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으로서 한국통일교육본부가 구성되고 이들이 민·관의 관련 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거버넌스 형태의 통일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내용 및 방법의 재조정 및 운영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제도적 차원에

서 수렴・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통일문화의 형성을 통한 통일문제 관심 제고이다. 통일이라는 문제가 딱딱하고 특정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청소년들이 함께 호흡하는 문화로서 다가가게 해야 한다. 즉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기초하는 통일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 통일문화가 단기적으로 형성될 수 없음은 자명하며,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통일문화 형성의 내용과 방향성에 관해 진지한 논의와 후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 스스로의 주체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통일문화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통합의 가치가 중심에 서야 할 것이며, 이를 청소년들에게 가슴 깊숙이 닿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재 진행 중인 나와 우리의 문제라는 점을 체득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 청소년교류, 북한현지 방문, 남북 교류협력의 현장 견학, 탈북주민・청소년과의 대화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한 청소년교류 는 비록 북한이 정치성을 가지고 대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의 현실, 남북관계의 현실을 이해하고, 왜 남북교류협력과 평화번영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적극 검토・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남북 청소년교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남북청소년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의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또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

하여 사이버 세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도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시각과 관심이 고려·반영되어야 한다. 그 외 청소년들 사이에 북한·통일과 관련된 각종 동호회 모임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축제의 개최도 통일문화 형성에 주요한 축이 될 것이다. 한편 오늘날 대학입시는 청소년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현재의 문화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북한·통일관련 행사도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중매체의 객관성이 청소년 통일문화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청소년들이 북한·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그만큼 방송과 언론은 청소년의 통일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구나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스스로 이념적 성향을 '중도'라고 밝히고 있는 현실과 주변적 환경의 영향에 따라 이념적 성향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비판능력이 다소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대중매체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북한·통일문제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기를 기성세대가 희망한다는데 공감한다면 대중매체가 보도·방영에 있어서 갈등과 편견, 오해를 조장하는 일은 피해야 할 일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곽태환 외.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안. 서울: 통일교육연구소, 2004.

권오정.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탐구당, 1987.

길은배 외.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길은배.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신세호 외.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주)월드리서치.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서울, 2005.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독일연방정치교육본부. 서울, 2001.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황병덕.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Innerdeutsche Beziehungen.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80-1986: Eine Dokumentation*. Bonn, 1986.

Hülsmann, Martin. *Drüben bei uns. Eine Begegnung mit der DDR*. Würzburg, 1986.

Kiersch, Gerhard. *Die jungen Deutschen. Erben von Goethe und Auschwitz*. Opladen, 1986.

Kuhn, H. W. u. a.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Opladen*, 1993.

Schmidt, Harald. *Der Deutsche Jugend-Tourist. Jugendsoziologische Studien über Reiseinteressen und -tätigkeiten junger Leute aus Ost- und Westdeutschland 1989/90*. Berlin, 1990.

Weinacht, Paul-Ludwig (ed.). *Mit offenen Augen in die DDR. Anregungen für Klassenfahrten*. München, 1986.

## 2. 논문

권이종. "통독 전 동·서독간 청소년교류가 남북청년 교류에 주는 시사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독 전 동·서독간 청소년교류가 남북청년 교류에 주는 시사점.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차 청년위원회 발표자료집, 2005. 9. 30.

길은배, "청소년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미발표 원고, 2005.

문해성. "남북 청소년교류의 활성화 방향 및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독 전 동·서독간 청소년교류가 남북청년 교류에 주는 시사점.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차 청년위원회 발표자료집, 2005. 9. 30.

손기웅. "베를린 선언의 의의와 과제." 통일연구원. 베를린선언과 남북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신두철. "독일의 정치교육과 시사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http://www.civilzine.or.kr>.

_____. "독일의 정치교육제도와 시사점."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연례학술대회 논문집 (2003).

심익섭. "독일정치교육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연방정치교육본부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논총, 3 (1998).

_____.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논리." 김민정 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서울: 엠-애드, 2004.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대전대학교 민주시민교육 발표원고, 2005. 6. 21.

정용길. "동서독 정치교육의 비교." 분단국 통일론. 서울: 고려원, 1989.

정창화.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김민정 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서울: 엠-애드, 2004.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http://www.ksrc.or.kr/youth.html>.
한스-게오르크 마이어. “독일정치교육의 구조와 의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http://www.civilzine.or.kr>.
허영식. “정치교육의 체계와 운영.” 전득주 편. 독일연방공화국. 서울: 대왕사, 1995.
허영식. “현대사회의 변동과 시민교육.” 2001.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 Stand und Perspektive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BR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Sonderdruck* (10. April 1992).
Bunjes, Ulrich. “Normalität stellt sich nur langsam ein. Zur Entwicklung des deutsch-deutschen Jugendaustausches.” *Außerschulische Bildung* (1989).
Deutscher Bundesjugendring (ed.). “Die unbekannten Nachbarn - Deutsch -deutscher Jugendaustausch.” *Jugendpolitik*, 7 (1986).
Helwig, Gisela. “Jugendaustausch zwischen beiden deutschen Staaten.” *Deutschland-Arkiv*, 8 (1984).
Sander, Wolfgang. “Geschichte, theoretische Konzeption und aktuelle Herausforderung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1차 한독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4.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 | | | | |
|---|---|---|---|---|
| 2003-01 |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 최의철 | 저 | 6,000원 |
| 2003-02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 이우영 | 저 | 5,000원 |
| 2003-03 | 「조선녀성」 분석 | 임순희 | 저 | 6,000원 |
| 2003-04 |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 서재진 | 저 | 6,500원 |
| 2003-05 |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 여인곤 외 | 공저 | 8,500원 |
| 2003-06 |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 이헌경 | 저 | 5,000원 |
| 2003-07 |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 김영춘 | 저 | 4,000원 |
| 2003-08 |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최춘흠 | 저 | 3,500원 |
| 2003-09 |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 박영호 외 | 공저 | 8,500원 |
| 2003-10 |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 박형중 | 저 | 7,000원 |
| 2003-11 |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 최진욱 | 저 | 5,000원 |
| 2003-12 | 북한의 후계자론 | 이교덕 | 저 | 4,500원 |
| 2003-13 |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 박영규 | 저 | 5,500원 |
| 2003-14 |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 전현준 | 저 | 4,000원 |
| 2003-15 |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 박형중 외 | 공저 | 10,000원 |
| 2003-16 | 통일예측모형 연구 | 박영호 외 | 공저 | 8,000원 |
| 2003-17 |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3-18 |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3-19 |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 임강택 외 | 공저 | 5,000원 |
| 2003-20 |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 최수영 | 저 | 3,500원 |
| 2003-21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 이금순 | 저 | 5,500원 |
| 2004-01 |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최의철 | 저 | 6,000원 |
| 2004-02 | A CRITICAL JUNCTURE | 최진욱 | 저 | 4,000원 |
| 2004-03 |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 임순희 | 저 | 5,000원 |
| 2004-04 |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5 |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 황병덕 외 | 공저 | 9,500원 |
| 2004-06 |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 김영춘 | 저 | 4,000원 |
| 2004-07 |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 홍관희 | 저 | 4,500원 |
| 2004-08 |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 김영윤 | 저 | 7,500원 |
| 2004-09 |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 정영태 | 저 | 5,000원 |
| 2004-10 |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 김수암 | 저 | 6,000원 |
| 2004-11 |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 박형중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2 |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 박영호 | 저 | 5,500원 |
| 2004-13 |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 임강택 외 | 공저 | 6,000원 |

| | | | | |
|---|---|---|---|---|
| 2004-14 |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br>: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 서재진 | 저 | 7,500원 |
| 2004-15 |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 손기웅 | 저 | 5,000원 |
| 2004-16 |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br>: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 조한범 | 저 | 4,500원 |
| 2004-17 |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 여인곤 외 | 공저 | 9,000원 |
| 2004-18 |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 이금순 | 저 | 5,000원 |
| 2004-19 |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br>: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 최수영 | 저 | 4,000원 |
| 2004-20 |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 이 석 | 저 | 9,000원 |
| 2005-01 |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br>A Case of South Korea | 전성훈 | 저 | 7,000원 |
| 2005-02 |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 최의철 | 저 | 8,000원 |
| 2005-03 |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 조정아 | 저 | 7,000원 |
| 2005-04 |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br>: Issues and Suggestions | 김규륜 | 저 | 4,500원 |
| 2005-05 |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 김영춘 | 저 | 5,000원 |
| 2005-06 |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 이금순 | 저 | 6,500원 |
| 2005-07 |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 임순희 | 저 | 5,500원 |
| 2005-08 |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 황병덕 | 저 | 9,000원 |
| 2005-09 |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 김영윤 | 저 | 7,000원 |
| 2005-10 |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 손기웅 | 저 | 5,500원 |
| 2005-11 |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 조한범 | 저 | 6,000원 |
| 2005-12 |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5-13 |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 김수암 | 저 | 7,000원 |
| 2005-14 |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 허문영 | 저 | 7,500원 |
| 2005-15 |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br>: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 이교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5-16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 조 민 | 저 | 6,000원 |
| 2005-17 |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 이 석 | 저 | 7,000원 |
| 2005-18 |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 최수영 | 저 | 5,500원 |
| 2005-19 |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 배정호 | 저 | 6,500원 |
| 2005-20 |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 김국신 | 저 | 5,000원 |
| 2005-21 |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br>역할과 한반도 문제 | 박영호 | 저 | 8,500원 |
| 2005-22 |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5-23 |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br>한국의 정책공간 | 박형중 | 저 | 5,000원 |

## 북한인권백서

| | |
|---|---|
| 북한인권백서 2003 |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4 |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5 |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 | |
|---|---|
|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 6,000원 |
|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 6,000원 |
|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 6,000원 |

## 학술회의총서

| | |
|---|---|
|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 5,000원 |
|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 5,500원 |
|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 10,000원 |
|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 10,000원 |
|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 8,000원 |
|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 7,500원 |
|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 5,500원 |
|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 6,500원 |
|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 10,000원 |
|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 9,000원 |
|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 8,000원 |
|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 10,000원 |
|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 10,000원 |
|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 10,000원 |
|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 10,000원 |

## 논 총

| | |
|---|---|
|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1 (2003) | 9,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2 (2003)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 10,000원 |

## 영문초록

| | | |
|---|---|---|
| 2003-1 | KINU Research Abstracts '02 |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 | | | | |
|---|---|---|---|---|
| 2003-01 |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 | | 10,000원 |
| 2003-02 |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 허문영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3 |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 최진욱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4 |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 제성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5 |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 한만길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6 |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 이상만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7 |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 이금순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8 |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 박영규 외 | 공저 | 9,000원 |
| 2004-01 |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 | | 10,000원 |
| 2004-02 |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 여인곤 외 | 공저 | 7,000원 |
| 2004-03 |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4 |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 제성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5 |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 고정식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6 |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 양문수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7 |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 이금순 외 | 공저 | 8,500원 |
| 2004-08 |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 김영춘 외 | 공저 | 5,500원 |
| 2004-09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 | | 10,000원 |
| 2004-10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 | | |

| | | | | |
|---|---|---|---|---|
| | 인식의 모색 | 오명석 외 | 공저 | 5,500원 |
| 2004-11 |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 김명섭 외 | 공저 | 5,000원 |
| 2004-1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 양영균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3 |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 박경하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4 |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 서중석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5 |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 조한범 외 | 공저 | 9,500원 |
| 2004-16 |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 최진욱 외 | 공저 | 6,500원 |
| 2004-17 |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윤종설 외 | 공저 | 5,000원 |
| 2004-18 |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 강일규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9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 전재경 외 | 공저 | 8,000원 |
| 2004-20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 이진국 외 | 공저 | 6,000원 |
| 2004-21 |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 김이선 외 | 공저 | 8,500원 |
| 2004-2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 윤철경 외 | 공저 | 10,000원 |
| 2004-23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 한만길 외 | 공저 | 10,000원 |
| 2004-24 |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 박기홍 외 | 공저 | 6,000원 |
| 2004-25 |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 김광억 외 | 공저 | 4,000원 |
| 2004-26 |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 김광억 | 저 | 4,500원 |
| 2005-01-01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 김명섭 외 | 공저 | 9,500원 |
| 2005-01-0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 문옥표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03 |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 서중석 외 | 공저 | 9,000원 |
| 2005-01-04 |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전성훈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05 |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 배정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06 |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 최의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07 |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 윤종설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08 |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 강일규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09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 전재경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10 |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장준오 외 | 공저 | 8,000원 |
| 2005-01-11 |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 김이선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1-1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 | | |

| | | | | |
|---|---|---|---|---|
| | 구축 연구 | 오해섭 외 | 공저 | 9,000원 |
| 2005-01-13 |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 한만길 외 | 공저 | 9,000원 |
| 2005-08-01 |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 | | 10,000원 |
| 2005-08-02 |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 김국신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3 |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4 |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 이철수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5 |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 박광기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6 |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 양문수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7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 이금순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8 |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 김영춘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9-01 | 동북아 NGO 백서 | 전봉근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9-02 | 동북아 NGO 연구총서 | 조한범 외 | 공저 | 10,000원 |

◈ 비매품 ◈

## 통일정세분석

| | | | |
|---|---|---|---|
| 2003-01 |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 | 신상진 |
| 2003-02 |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 | 임강택 |
| 2003-03 |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 | 최의철, 임순희 |
| 2003-04 |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 | 이헌경, 박영호 |
| 2003-05 |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 | 배정호 |
| 2003-06 |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 | 박형중, 정영태 |
| 2003-07 |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 | 박형중 |
| 2004-01 |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 박형중, 전현준, | 이교덕, 최진욱 |
| 2004-02 |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 | 북한연구실 |
| 2004-03 |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 | 조한범 |
| 2004-04 |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 | 박형중 |
| 2004-05 |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 | 최의철 |
| 2004-06 |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 | 전성훈 |
| 2004-07 |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 | 여인곤 |
| 2004-08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 | 이석, 최진욱 |
| 2004-09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 | 최의철, 임순희 |
| 2004-10 |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 | 이교덕, 신상진 |
| 2004-11 |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 | 김영춘 |
| 2004-12 |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 | 전성훈 |
| 2004-13 |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 서재진, 이교덕 |
| 2004-14 |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 | 김영춘 |

| | | |
|---|---|---|
| 2004-15 |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 김영윤, 박정란 |
| 2004-16 |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 김수암, 이금순 |
| 2004-17 |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br>: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 박영호, 김국신 |
| 2004-18 |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br>: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 김국신, 박영호 |
| 2004-19 |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 전병곤 |
| 2004-20 |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 김국신, 박영호 |
| 2004-21 |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 전병곤 |
| 2005-01 |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
| 2005-02 |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 김영윤, 최수영 |
| 2005-03 |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 정영태 |
| 2005-04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
| 2005-05 |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 최의철, 김수암 |
| 2005-06 |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 전병곤 |
| 2005-07 |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 김영춘 |
| 2005-08 |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 김영윤, 최수영 |
| 2005-09 |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 이금순, 임순희 |
| 2005-10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 박형중, 최진욱 |
| 2005-11 |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br>: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 최의철, 임순희 |
| 2005-12 |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 배정호 |
| 2005-13 |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 김수암 |
| 2005-14 |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 황병덕 |
| 2005-15 |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 손기웅 |
| 2005-16 | 일본 총선 결과 분석 | 김영춘 |
| 2005-17 |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
| 2005-18 |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 배정호 |
| 2005-19 |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
| 2005-20 |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 김규륜 |

## KINU정책연구시리즈

| | | |
|---|---|---|
| 2005-01 |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 허문영 |
| 2005-02 |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
| 2005-03 |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 홍용표, 조한범 |
| 2005-04 |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 김근식 |
| 2005-05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 조성렬 |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써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절

취

선

# 회원가입신청서

|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근 무 처 | | | | |
| | 직 위 | | | |
| 간 행 물 받을 주소 | (우편번호 : ) | | | |
| 연 락 처 | 전 화 | | FAX | |
| | 전자메일 | | | |
| | ID | | PW | |
| 전 공 및 관심분야 | | | | |
| 회원구분 |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 |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ISBN 89-8479-334-5